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기획특집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전·세종의 과제

‘예술지원사업’의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대전의 예술지원 예산 현황과 대응 방안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격차 현안과 해소방안

문화적 도시재생과 대전의 문화적 기반

대전 원도심의 '사라지는 흔적들과 문화적 장소성'

대전의 문화 현실 : 문화공동체의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대전·세종

DAEJEON
SEJONG
FORUM

미래지향적 도시정책 연구 선도

- 도시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 연구
- 연구지원체계의 선진화
-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정책기여도가 높은 연구성과 생산

- 활용도 높은 맞춤형 정책 개발
-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지원
- 시민 참여형 정책네트워크 강화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공동체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회계시스템 확립
- 소통, 신뢰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1호

대전세종포럼

제 71호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전 · 세종의 과제

Contents

- 07 '예술지원사업'의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대전의 예술지원 예산 현황과 대응 방안
이희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20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김창수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 36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격차 현안과 해소방안
안남일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교수
- 50 문화적 도시재생과 대전의 문화적 기반
김종범 대전대학교 교수
- 66 대전 원도심의 '사라지는 흔적들과 문화적 장소성'
이상희 사단법인우리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 84 대전의 문화 현실
: 문화공동체의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1장

‘예술지원사업’의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대전의 예술지원 예산 현황과 대응 방안

이 희 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예술지원사업'의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대전의 예술지원 예산 현황과 대응 방안¹⁾

이 희 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DAEJEON
SEJONG
FORUM

I. 예술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국고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종료 개요

- 수입재원 부족 및 기금 수요 확대로 적립기금 고갈 위기
 -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이후 기금 지원수요 확대에 따라 '05년부터 수입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적립금의 일정액(300억원 내외)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위원회의 자원 사정은 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적립기금 고갈 위기를 맞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위기는 단순한 문제 아니라 민간위원회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기초예술진흥에 관한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지원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

위의 글은 2006년 11월 17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5년 9월 29일 출범)에서 발표한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입장'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문예진흥기금' 징수가 폐지되어(2003년), 기금의 추가 적립이 없는 상태에서 적립금 인출이 지속되면서 10년 이내 고갈 위기를 예견한 것이다. 이후 적립금 인출과 국고지원, 복권기금 전입 등으로 예술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2016년에 사실상 기금이 고갈되어 2017년부터는 정상적

1)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2017년부터는 3년간의 한시적인 국고지원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포함되어 예술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2019년 ‘균특회계’가 종료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지방이양 사업은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확충하여 주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국고 지원과 같은 금액을 지방비로도 예술지원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지방정부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의 예술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II. ‘자치분권 종합계획’

기존의 ‘문예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공포하여 문화의 근본적인 가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문화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선포하고, 9대 의제별 대표 과제에서 6번째 항목으로 ‘지역문화분권실현’을 천명하였다.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협치를 통한 문화자치가 문화 분권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이면서도 더 포괄적인 정책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8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4가지로 ①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②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이며, ③ 중앙과 지방간,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④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이중에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재정분권으로, 현재 8: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편하여 지방 세수를 확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한다는 것이다.

〈표 1〉 자치분권 종합계획 요약(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9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 국가-자치사무배분 원칙기준 명확화	지방이양 대상 협의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국가 환원 추진
	○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광역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적 기능은 광역으로 합리적 재배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기존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방식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선 발굴·이양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 8:2→6:4)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19년 15% → '20년 21%
	○ (지방소득세) 현행 국세(소득세·법인세) 세율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국고보조 사업개편	○ (국가책임 강화) 국가 - 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보장적 복지사업 국가 책임 강화 추진	
	○ (지방사업화) 지역 현장여건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 추진	
	○ (원칙·기준) 기준보조를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 부담을 합리화하여 지방이 책임있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 수립	
자치단체 간 협력 지원	○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권역별 공동발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생활 관련 기능의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자치분권형 평가 구축	○ 지방이 스스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이 정책에 따라 현재의 균특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의 국고 지원이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Ⅲ. 2019년 대전 예술지원 예산 구조와 지방 이양 항목

'자치분권, 문화분권'은 오랫동안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고, 올바른 방향이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달식 분권에 대한 비판이 있고, 지방 세수를 확장한다고 할 때,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의 또 하나의 목표인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예술계와 예술지원을 담당하는 광역(대전)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고 지원의 예술지원 항목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지방비 편성의 의무가 사라질 경우, 향후 예산편성에서 기초예술지원(또는 예술창작지원)이 얼마나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될까 하는 것이다.

'생활문화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이명박 정부)과 '문화융성'(박근혜 정부)이라는 멋진(?) 구호 아래 향유자 중심의 '문화복지'와 '생활동호회' 분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예술창작지원은 상대적으로 감축되었다는 박탈감을 경험한 바 있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표 2〉 2019 대전 예술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계	국비	사비	비고
	총계	4,148	1,129	3,019	
	소계(지특)	2,068	799	1,269	
1	예술창작지원	1,050	395	655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2	아티언스 대전	400	100	300	
3	차세대ArtiStar지원	150	75	75	
4	레지던시지원	120	60	60	
5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60	30	30	
6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60	30	30	
7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50	20	30	
8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관리	60	30	30	
9	특성화운영비	118	59	59	
	소계(공상)	660	330	330	
1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60	330	330	
	소계(시비)	1,420	-	1,420	
11	원로예술인창작활동지원	200	-	200	시비 (출연금)
12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	200	-	200	
13	장애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90	-	90	
14	원도심 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지원	300	-	300	
15	문화순회지원	400	-	400	
16	문화예술분야연구창작활동지원	50	-	50	
17	협업형예술창작생태계조성사업	100	-	100	시비 (수탁대행)
18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지원	50	-	50	
19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프로젝트	30	-	30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총액이 4,148백만원이다. 전액 대전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11~19)에 해당하는 1,420백만원을 제외하고 국고 지원이 포함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1~9)은 국고 799백만원과 시비 1,269백만원으로 합해서 2,068백만원의 지원금이 이번 재정이양으로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2020년부터는 국고지원이 불가하여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니라, 지방비에서 모두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방이양대상사업이다.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별도로 모두 예술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분야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내년(2020년)에 종료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 금액은 올해(2019년)을 기준으로 2,728백만원이다.

IV. 문화예술분야 재정이양 관련 대응 과정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²⁾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지역문화예술정책 관련 협의 기구들은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이양이 미칠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4차례에 걸쳐 관련 워크숍, 토론회, 소위원회, 포럼 등등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 국비지원 제외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 예산 감축 우려(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축소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 공감하고, 둘째, 기초문화예술지원 분야에 대한 중앙의 대안 정책 마련 필요(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기초예술을 지방사무로만 볼 것이 아닌 국가 예술진흥 정책 차원으로 검토 필요)함에 동의하고, 셋째, 중앙으로서의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역할 수행(‘국가문화예술진흥’의 측면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역할 수행)을 요구하였다.

지역의견 수렴과정(6월 19일, 한지협 임시총회)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문체부 예산 중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포함하여 국가보조사업(균특회계)에서 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3.6조 원 규모의 이양대상 사업들은 향후 3년간(2020~2022년)동안 확충된 지방소비

2) 문예진흥법 36조는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예술위원회는 16개 광역문화재단 및 17개 광역시도를 회원기관으로 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라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세 증가분으로 정액 보전한다고 하였다.

이는 올해 한광연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라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3년 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6개 법안(「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교육교부금법」, 「세종시특별법」)이 금년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하며,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내년 추경편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 광역문화재단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8월이면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입부분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11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론은 통보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광연과 한지협 논의 과정과는 별도로 대전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한광연과 한지협의 논의가 본격화되 앞서 5월 하순부터 6월 초 사이에,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와 각 장르별 협회 대표, '(사)대전민예총'과 각 분과위원장을 만나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고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 예산 결정 단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더 많은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문화분권 시대의 현 상황 분석과 지역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을 화두로 하여 [2019 대전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 대토론회 '대전문화예술 미래를 준비하다']를 개최하여 대전의 예술계와 현 상황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예술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전시에서도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균특회계 3년 유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8월에 편성하는 대전문화재단의 2020년 예산안에 기존의 균특회계 해당 항목을 전액 시비로 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른 입장 표명이었다)

V. 내년도(2020년) 대전 예술지원사업 예산 편성 현황

2019년 11월 4일 현재 편성한 내년도(2020년) 예산 중, 기존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예술지원사업 예산은 총 2,60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0백만원이 증액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예술창작지원을 청년예술인지원과 중견예술인지원으로 분리하고, '차세대Artisar지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지원사업'과 '청년예술 정착 및 양성 프로젝트'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42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삭감된 국악야외상설공연 지원(60백만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재편성될 경우,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2020년도 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부분)의 증액은 520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20 대전 예술지원사업(2019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부분) 편성표³⁾

사업명	2019			사업명	2020	
	계	국비	시비		계	증감
예술창작지원		395	655	중견예술인지원	900	420 (500)
차세대ArtiStar지원	150	75	75	청년예술인지원	800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지원	50	-	50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프로젝트	50	-	30			
아티언스 대전	400	100	300	아티언스 대전	400	-
레지던시지원	120	60	60	해외레지던시 작가파견지원사업	120	-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60	30	30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	△60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60	30	30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50	90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50	20	20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60	10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관리	60	30	30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성과관리	178	-
특성화운영비	118	59	59			
합계		799		합계	2,608	460

※ 지역특성화사업(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전액 시비 수탁사업(2019년 항목)

이는 지역특성화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인 균특회계 종료에 따른 예술지원금액의 감축 위기를 지역에서 자체적인 예술지원금을 확보하고 오히려 증액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며, 문화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대전시장의 의지와 대전시의 정책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을 포함하여 시비 사업이었던 ‘수탁대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출연금’으로 전환한 것은 예술지원예산 확보와 증액 사실만큼이나 큰 의미를 갖는다.

출연금은 ‘수탁대행사업’에 비해 단위사업별 정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세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고, 낙찰차액, 지원 선정 단체의 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금, 은행 이자 등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재단의 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진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아직 대전시의회회의 본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수정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특성화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각 지역(대전)의 특성과 현실에 맞춘 지원사업 구성과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점이다.

Ⅵ. 향후 과제

1. 장기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 수립

기존의 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 증액하고, 수탁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시장과 대전시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추가 증액을 믿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담배세에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요구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그와는 별개로 대전에서의 지속적인 예술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번 균특회계 종료에 따른 예술 지원 재정 논란을 계기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외에는 재정 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협정문 제11조에서 역량 배양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규제하였다. 역량배양에 대한 파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배양 활동은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고되어야한다. 이에 관해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 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 사업
2.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사업
3. 문화예술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사업
4.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
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7.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사업
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10.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

정부의 정책은 예산으로 현장에 발현된다. 역시, 예술진흥에 대한 어떠한 정책, 제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⁴⁾

또한 시민과 기업의 후원을 통한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관련 제도(규정)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예술지원 방식의 다각화

지역의 예술지원은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을 한다는 수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생태계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예술가가 예술생태계의 가장 1차적인 주체로서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예술진흥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며, 창작지원이외에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관점에서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일찍이 직접적인 창작지원 외에도 공간 지원 등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다각화와 지역 예술계의 요구를 담아 예술경영지원과 예술인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예술위원회를 통한 창작지원 중심에서 탈피, 예술지원영역을 4대 영역으로 확대하고, 문광부 산하에 4대 영역의 지원하는 예술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

〈표 4〉 예술지원의 4대 영역과 세부내용

문화예술 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작비지원 (직접지원) ▶ 작품개발비지원 ▶ 창작공간지원 등의 간접지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 시민(전세대, 전계층)의 문화복지차원 지원 ▶ 사회적 문제해결과 변화시키는 역할 「2010 서울아젠다 목표3」
문화예술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운영 컨설팅 ▶ 국비공모사업 컨설팅 ▶ 작품 유통지원 (아트마켓) ▶ 전문인력 육성 및 파견 (경영인력, 기획자, 활동가 등)
예술인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사회보장보험 지원 ▶ 예술인활동 안정자금 지원 ▶ 예술인 활동환경조성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 예술인 노무지원

4) 현재 대전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 방안과 함께 기금의 재원 확보 방식과 목표액, 그에 따른 수익을 위한 운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함”. “재단의 지원사업은 창작영역 중심에서 4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하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처럼 지역재단에 4대 지역센터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

(문옥배, 2019 대전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 대토론회, 2019. 7. 23.)

이 4대 영역의 세부내용은 더할 것도 있고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술가(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지원과 간접지원(공간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확대하였다.(2020년 예산 반영) 내년부터는 ‘예술경영지원’ 항목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년예술인, 기획자의 창업(취업)과 예술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와 사회적 경제화(전문예술단체/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2013년에 대전예술인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전 예술인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예술인실태조사’를 2019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제 출발 단계인 ‘예술경영지원’과 ‘예술인복지지원’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위의 4대 영역예술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Ⅶ. 마치며

이 글의 주제가 예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 중단(균특회계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예술지원 예산 확보와 예술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재정 이양의 근본 취지가 문화분권, 문화자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에의 권한 이양의 의미로 출발하였지만, 지역 내에서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 창작자로서의 전업예술가와 생활문화동호회, 향유자로서의 시민이 지원의 대상으로만 위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의 설계와 진행의 중요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팔길이 원칙’⁵⁾과 ‘보충성의 원리’⁶⁾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대전)문화재단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각 주체들 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전문, 매개)인력 양성,

중간 지원조직의 형성(또는 강화)과 네트워크 구축⁷⁾, 광역과 기초 단위를 망라한 공공(기관)과 민간(예술계, 공동체)의 거버넌스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기초예술 지원의 약화 가능이라는 일시적 위기를 넘겼지만, 예술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해 문화재단과 함께 예술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정부가 특정 기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

6)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자세. 권한을 분산하고 많은 사람이 찬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하는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상위 단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7) 문화원(연합회),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포함), 각 문화관련 기관/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기초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지역(대전)문화협력위원회'를 상향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김창수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김 창 수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DAEJEON
SEJONG
FORUM

I. 왜 생활문화에 주목하는가?

일반적으로 문화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닌 경우 생활문화라고 하면 일상생활의 문화적인 측면을 떠올리기 쉽다. 또한 문화와 관련하여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생활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혼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문화란 무엇일까? 생활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과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에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의 개념은 “지역의 주민이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문화’라는 개념이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듯이 이 또한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생활문화는 생활예술 혹은 생활문화예술 등과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생활문화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한국사회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인구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 성장률이 하향세인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

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여타 지역과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이주 외국인 수의 꾸준한 증가 또한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지원을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인구 구조 또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2030세대뿐만 아니라 4050세대나 노인세대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일상적 삶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 중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증대, 물질보다 경험에 대한 소비의 증가, 여가활동과 관련한 욕구의 증대 등 현대인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이면에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나 연월차의 적극적 활용 권장 등의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문화적 향유의 과정을 통해 문화 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제의 변화와 맞물려 개인적 의식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점이다. 문화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공동체 의식 회복 및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내 외의여타 사례들을 접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축제의 개최나 지역 특산품의 개발등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관광이나 쇼핑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수익으로 직결될 수있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기본권이나 문화민주주의의 개념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 주민이 문화의 주체로서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서 생활문화의 정책 수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고 2장에서는 생활문화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3장에서 대전과 세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대전과 세종의 생활문화와 관련한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활성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전개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2015년 2월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으로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로 전제된 후 추진 방향으로 ‘지역생활과 밀착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인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¹⁾

1.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 내 유휴시설이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매년 30개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입지나 규모, 그 기능 등을 감안하여 1,000㎡ 내외의 거점형(시·군·구)과 200㎡ 내외의 생활권형(읍·면·동)으로 구분하고, 각각 동아리방이나 작은 도서관, 다목적 홀 등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시설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생활문화아카데미의 운영을 통해 커리큘럼의 개발 및 구성, 통합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2)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지원

현존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 생활문화와 관련한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생활문화동화회에게 연습과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와 체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예술가와 생활문화동화회의 멘토링 지원, 지역주민의 공연이나 축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는 국·공립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시설 간 연계활동의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 도시 내에서도 기관과 기관 혹은 시설과 시설 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류 및 연계 활동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기관별 정책 입안이나 예산 운용 방식이 다른 상황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곧 연계와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문화시설 관계자, 문화전문가 등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또한 이를 전국 차원에서 수렴하기 위해 전국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호회의 존재는 생활문화 지원 사업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수요를 담당할 동호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호회 지원 정책에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동호회의 형성과 동호회 간의 교류와 협력, 연대 등을 위한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호회에 대한 개별 지원은 지원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거나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전부터 심심찮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

1) 주민주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주민이 주도하여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이 공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가스 등의 관리비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동체 연극의 제작이나 공연, 영화 제작과 상영 등 지역공동체 기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문화취약지역(임대주택단지, 농산어촌 등)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젝트(공연, 연극, 상연 등)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2)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축제 개최

생활문화동호회 및 마을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별 생활문화 축제의 개최를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간 교차로 전시·공연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실현을 추진한다.

생활문화 축제의 경우 2019년 현재 각 단위별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각 시·군·구별로 축전이 개최되는가 하면, 광역 단위의 협력에 의해, 전국단위의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²⁾

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1) 문화자원봉사 지역 지원센터 운영

각 지역별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을 문화자원봉사 상담 안내 지역 지원센터로 운영한다. 또한 각 시설별 업무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일감 확대 및 문화자원봉사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한다.

2) 은퇴자들의 재능 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 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문화자원봉사로 유도하기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 및 다양한 여가 활동 방안을 창출한다. 생활문화 관련 은퇴자들이 생활문화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인문정신, 문화예술, 대중예술 등 분야별 우수 재능 나눔형 문화자원봉사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다.

Ⅲ. 대전과 세종의 생활문화 시설 및 사업추진 현황

대전시와 세종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조응하여 2017년부터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지원 사업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전과 세종의 생활문화 사업 추진 현황

1) 대전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지원사업 현황

대전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7년의 일이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에 대해 엄격한 분리보다는 혼용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생활문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예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대전문화재단이 주최한 '2019 충청권 생활문화축제'가 8월 대전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 '2019 전국생활문화축제'가 9월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표 3-1〉 2017년 대전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기회 제공	100
대전 마을합창단 운영지원	대전마을합창단 정기공연 활성화 및 운영 지원	37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층)	3,229
우리마을문화공동체 조성	주민주도의 예술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화 환경조성	80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개설	150
대통령상전국합창경연대회	아마추어 합창단 예선 및 본선 경연	110
대전마을합창축제	지역 내 마을합창단을 대상으로 한 합창축제 개최	100

출처 : 대전문화재단(2018), 2017 대전문예연감. 201쪽.

2017년의 생활문화 지원 사업은 총 179건에 달했는데, 각 월별 활동 건수 및 비율을 보면 겨울철에는 뜸하다가 가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2017년 월별 생활문화예술지원 활동 건수 및 비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1	1	3	3	10	15	13	16	24	34	36	23	179
비율(%)	1	1	2	2	6	8	7	9	13	19	20	13	100

출처 : 대전문화재단(2018), 2017 대전문예연감. 202쪽.

2018년에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더욱 다양해지면서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건수가 2017년에 비해 약 76.8%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3월에 연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3-3〉 2018년 월별 생활문화예술지원 활동 건수 및 비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5	0	53	18	25	21	15	16	21	24	27	8	233
비율(%)	2	0	23	8	11	9	6	7	9	10	12	3	100

출처 : 대전문화재단(2019), 2018 대전문예연감. 220쪽.

또한 2018년에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들썩들썩 원도심’이라는 문화공연을 137개의 단체를 통해 137회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리마을 공동체 사업 또한 2017년 14개 프로그램을 통해 110회를 진행하였는데, 2018년에는 16개 프로그램으로 134회를 진행하여 참여인원에서도 1,933명에서 3,295명으로 70.4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와 마을합창축제, 지역예술가 공연 및 프리마켓 등을 2017년 이래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지원 행사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마다 행사의 수나 참여 인원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 세종시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추진 현황

세종시문화재단 또한 2017년부터 생활문화사업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생활문화 지원의 전형적인 프로그램의 하나인 세종시민들이 거리에서 예술 공연의 기회를 제공한 ‘길거리 공연’은 12개 팀을 선발하여 17개의 장소에서 모두 51회가 진행되었다.

〈표 3-4〉 2017년 길거리 공연 현황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계
공연횟수(회)	8	5	8	8	9	10	3	51
행사장소(개소)	3	2	2	3	4	2	3	17
관람객수(명)	1,400	700	1,000	1,100	1,400	990	550	7,140

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강좌인 ‘여민락 아카데미’가 5개 분야에서 74회 실시되었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는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또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었다.

2018년에는 세종시문화재단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생활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8년의 길거리 공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5〉 2018년 길거리 공연 현황

일 시	4월	5월,6월	7월	8월	9월	10월
장 소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 섬	조치원 중심가로	제천뜰 근린공원	도담동 중앙공원	아름동 복합커뮤니 케이션센터 앞	조치원역 광장
관객수	1,830명	1,190명	2,010명	1,455명	1,160명	560명

이 외에도 여민락 아카데미는 특별강좌와 정기강좌가 126회 진행되면서 6,286명이 참가하여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또한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총 675명이 참가함으로써 9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장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인 “예술다반사” 등의 진행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대전과 세종의 문화기반 시설 현황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시설의 존재는 중요하다. 일상적인 만남과 연습, 공연과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문화시설이기 때문이다. 흔히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일컫는다.

〈표 3-6〉 전국 광역시 단위 문화기반시설 현황

시 도	합 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지자체	교육청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2,749	1	1,042	791	231	20	873	398	371	104	251	68	168	15	251	231	100
서울	386	1	160	132	22	6	129	28	73	28	43	5	33	5	23	25	5
부산	103	0	40	24	14	2	30	13	6	11	7	2	3	2	11	15	0
대구	74	0	36	19	10	7	15	7	5	3	4	2	0	2	11	8	0
인천	101	0	48	40	8	0	28	14	13	1	5	2	3	0	9	10	1
광주	61	0	23	17	6	0	12	5	3	4	10	2	7	1	7	5	4
대전	55	0	24	22	2	0	14	4	4	6	5	2	3	0	4	5	3
울산	41	0	18	14	4	0	7	1	1	1	0	0	0	0	5	5	4
세종	14	0	5	4	1	0	7	3	4	0	0	0	0	0	1	1	0

자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8)

〈표 3-7〉 인구 백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서울	9,741,871	39.62	16.42	13.24	4.41	2.36	2.57	0.51
부산	3,416,918	30.14	11.71	8.78	2.05	3.22	4.39	-
대구	2,453,041	30.17	14.68	6.11	1.63	4.48	3.26	-
인천	2,925,967	34.52	16.40	9.57	1.71	3.08	3.42	0.34
광주	1,496,172	40.77	15.37	8.02	6.68	4.68	3.34	2.67
대전	1,525,849	36	15.73	9.18	3.28	2.62	3.28	1.97
울산	1,157,077	35.43	15.56	7.78	-	4.32	4.32	3.46
세종	276,589	50.62	18.08	25.31	-	3.62	3.62	-

자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2018)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도시의 세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두 도시 모두 문화기반시설의 절대적인 수에서는 여타 도시에 비해 열세이지만 인구와 비례할 때는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대전시와 세종시는 여타 도시에 비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대전과 세종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현황

대전에는 2017년 기준으로 생활문화 관련 공공동호회는 274개에 2,922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동호회의 경우 약 238개에 4,34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3-8〉 대전시 생활문화 관련 공공 동호회 현황

구분		공공예술	문학	시각예술	기타	계
공공동호회 현황	동호회 수	123	41	79	31	274
	총 인원	1,696	249	741	236	2,922

출처 : 대전문화재단(2018), 2017 대전문예연감, 199쪽

〈표 3-9〉 대전시 생활문화 관련 민간 동호회 현황

구분		공공예술	문학	시각예술	기타	계
공공동호회 현황	동호회 수	75	89	54	20	238
	총 인원	1,851	894	1,386	214	4,345

출처 : 한상현(2017), 46~54쪽 재구성.

3) 공공 동호회는 대전문화재단을 위시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상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를 지칭하며, 민간 동호회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호회를 말한다.

IV. 대전-세종의 생활문화 활성화 상생협력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두 도시가 생활문화 활동 지원에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차별화할 것이다. 생활문화라는 용어 속에 이미 도시정체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생활양식에 따라 생활문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과 세종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인접 도시로서 생활권은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두 도시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향유권 또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도시의 상생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생활문화 정책 협력 및 정보 공유 등 문화서비스 강화

생활문화 정책 협력의 경우 두 도시의 특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공조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뿐더러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곧 '따로또 함께 가는 전략'을 통해 두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되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한 정책 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도시에서 각기 행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두 도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등 공공의 문화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협업과 연계, 연대의 경험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⁴⁾ 특히 연계를 통해 두 도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2. 생활문화 시설의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및 할인 제도 시행

사찰이나 서원 혹은 골프장 등 문화, 체육, 관광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 주민의 경우 일정한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지인을 푸대접하는 것 같이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 생각하면 지역민에 대한 우대 정책은 문화정체성 형성이나 애향심 고취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전과 세종, 나아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하여 문화

4) 대도시권의 협업, 연계, 연대와 관련해서는 황혜란 외(2018)을 참조.

시설들에 대해 이러한 할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교류와 연대에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생활문화 시설의 공동 이용시스템 구축 및 할인 제도 시행을 할 경우 관념적으로 생활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실제 활동 범위가 충청지역으로 확대되는 부수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활문화 관련 공공기관 협력 체제 구축

생활문화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등 주요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공공성 담보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각각 비슷한 업무와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애로사항이나 고민들,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문화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와 같이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류와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생활문화 관련 지원 공공기관은 너무나도 많고, 또한 각 기관마다 제각각의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생활문화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따라서 정보의 취합 또한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위상이 맞는 단체끼리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활문화 관련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4. 생활문화 관련 행사의 공동 개최

각 단위별 생활문화 축전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충청권 생활문화 축전이 대전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9월에는 전국 규모의 생활문화 축전이 청주에서 진행되었으며, 10월에는 충청남도 생활문화 축전이 개최되었다. 물론 각각의 축적을 그 위상과 규모에서 나름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각 권역별로 혹은 각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문화 축전이 개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은 없지만 그 내용이 몇몇 동호회의 경연의 장이거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많다.

대전과 세종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활문화 축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대전과 세

종의 경계인 금강을 공동의 주제로 하여 생활문화 축전의 개최를 제안한다. 금강을 소재로 한 그림이나 사진, 문학, 영상, 연극 등의 생활문화 축전을 통해 대전과 세종의 문화정체성을 발굴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

5.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혹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공동 개발

현재 생활문화의 매개자 역할은 대부분 전문예술인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문예술인 또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주로 경험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김재순(2019)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정책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05년에 비해 예산은 8.4배(1,760억원), 수혜자는 4배(3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는 다른 방식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강사 배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와 같은 문화자원봉사자들 또한 체계를 갖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V. 생활문화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들

생활문화가 활성화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먼저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문화예술의 소비자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의 전환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경우 프로와 아마추어, 생활체육이 어우러질 때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관중의 동원과 TV 중계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생활문화 활성화는 한 사회의 품뿌리 문화를 강화하여 문화예술, 나아가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한 사회 혹은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할 수도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 두 개의 생활문화를 익히고 즐기는 사회야말로 문화적으로 풍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도시 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

에 여러 가지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의 물리적 기능의 회복과 사회적 기능의 회복이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할 때, 사회적 기능의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재생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게이츠헤드는 한 때 탄광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석탄 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의 기능이 저하하면서 재생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가든 페스티벌’이나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의 행사와 ‘북쪽의 천사’, ‘발틱 현대미술관’, ‘게이츠헤드 밀레니엄브리지’ 등의 상징 시설들을 적극 활용한 덕분에 지금은 문화 주도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⁵⁾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도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공연이나 전시의 형태로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동질감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도시는 활력을 띠게 된다. 도시 곳곳에서 수시로 미술 전시나 공연이 열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주변이 들쭉거리게 되고, 그에 따라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되는 일은 당연지사이다. 나아가 적극적인 홍보나 자연스런 입소문에 의해 브랜드 가치가 쌓일 경우 관광 명소로 부상할 수도 있다. 또한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남는 시간에 도박이나 음주로 허비하기보다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5) 도시재생사업단(2014) 참조.

참고문헌

- 김재순(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협력 방안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2019 생활문화토론회 자료집.
- 세종시문화재단(2019), 2018년 세종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세종시문화재단
- 세종시문화재단(2019), 예술다반사, 세종시문화재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추미경(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2019 생활문화토론회 자료집.
- 최혜자(2019), 지금 다시 짚어보는 생활문화의 개념, 2019 생활문화토론회 자료집.
- 한상헌(2018), 대전문화예술교육계획, 대전문화재단.
- 한상헌(2018), <대전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대전광역시.
- 황혜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 대전문화재단(2018), 2019 대전문예연감, 대전문화재단
- 세종시문화재단(2018), 2017년 세종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세종시문화재단.
- 대전문화재단(2017), 2018 대전문예연감, 대전문화재단.
- 한상헌(2017), <대전 생활문화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도시재생사업단(2014),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 세계의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례, 한울.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격차 현안과 해소방안

안 남 일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격차 현안과 해소방안

안 남 일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교수

DAEJEON
SEJONG
FORUM

I. 81.5%와 87.0%

20세기를 ‘산업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시대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작동하고, 문화의 시대는 개인과 향유라는 키워드가 작동한다. 산업의 시대에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했고 문화의 시대에는 개인의 삶이 지니는 가치가 중요하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이러한 산업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의 변화에 대해서 삶의 기회(life chance)가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Life style)의 풍요와 다양성으로의 지향이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변화된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삶의 양보다는 질에, 삶의 기회보다는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평등과 함께 문화적 향유가 삶의 조건에서 핵심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화의 시대로 불릴 만큼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년마다 전국 17개 시도의 만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2018.12)”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81.5%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나 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예술 행사

에 직접 참여한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7년 78.3%에 비해 3.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상승폭으로 본다면 2006년 3.4%, 2008년 1.5%, 2010년 -0.1%, 2012년 2.4%, 2014년 1.7%, 2016년 7.0%로, 2003년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62.4%를 기록한 뒤 2006년 65.8%, 2008년 67.3%, 2010년 67.2%, 2012년 69.6%, 2014년 71.3%, 2016년 78.3%로 2010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문화적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관람률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률'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음악·연예'(21.1%), '미술전시회'(15.3%), '연극'(14.4%) 순이었다. 영화 관람률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였는데, 특히 대중음악·연예의 경우 21.1%로 2016년(14.6%)에 비해 6.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문화예술행사의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영화, 대중음악, 연예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읍면 지역이 71.7%, 중소도시는 82.1%로 2016년과 비교해 각각 6%, 1.1%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도시는 85.2%로 같은 기간 4% 포인트 높아져 지역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42.5%, 100~200만원은 58.4%로 2016년 조사(30.9%, 45.7%)보다는 각각 11.6%와 12.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91.9%)과 비교해보면 소득별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성별·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남녀 각각 5.5회와 5.8회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대의 관람 횟수가 평균 9.8회로 가장 높는데, 15~19세는 7.7회, 30대 7.1회로 15세부터 30대까지가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행사(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자)에서 보관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32.8%가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8.0%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3.3%),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12.5%)는 답변도 있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을 물어본 결과, 87.0%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영화(80.5%), 대중음악(29.9%), 뮤지컬(20.8%), 연극(20.5%) 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람 의향 87.0%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1.5%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문화 향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실제적인 향유를 위

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문화 예술행사를 관람한 시민은 35.6%로 관람 만족율은 47.6%이다.¹⁾ 이는 전체 관람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만족율 또한 높지 않다. 세종시 시민들이 제대로된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향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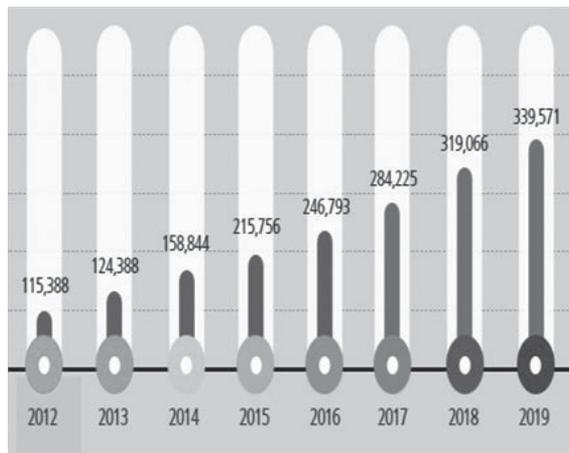
본고는 세종시의 문화격차 현안과 해소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문화적 관점에서 세종시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문화격차의 현안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종시의 문화격차 현안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의 일부(현 장군면),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현 부강면)를 편입²⁾하여 출범한 기획신흥도시이다. 출범 당시에는 1읍(조치원읍) 9면(연기면·장군면·부강면 등) 1행정동(한솔동)으로, 인구 10만 7백여 명에서 출발하여 2019년 9월 현재 1읍 9면 14동으로, 인구 33만여 명³⁾을 넘어서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 세종시 행정구역



〈그림 2〉 세종시 인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부교수

1) 세종의 사회지표(<https://www.sejong.go.kr/bbs/R0184/view.do>) 참조.

2) 세종소개(https://www.sejong.go.kr/kor/sub01_040101.do) 참고.

3) 세종통계(<https://www.sejong.go.kr/stat.do>) 참고.

세종시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선 세종의 묘호를 따서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⁴⁾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솔동(현, 한솔동과 도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제동(制動)'과 박근혜 정부의 '재가동(再可動)'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환경 변화를 거처서⁵⁾, 2012년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세종시는 외부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 구도심(조치원을 일대)의 원주민과 신도심(한솔동, 도담동 일대)의 이주민 사이의 화합과 이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차원을 열외로 한다고 해도 교육, 건강, 라이프스타일 등과 같은 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세종시의 지역적 격차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지역적 격차는 문화적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문화 향유라는 것은 소비활동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의 격차는 문화적 측면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화격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는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⁶⁾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문화 불평등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불균형”⁷⁾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학력, 직업, 지역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문화격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주로 지역과 세대, 계층 간에 발생한다.⁸⁾

장혜미, 김재범은 문화격차를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분류⁹⁾한다. 문화접근도는 문화시설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근간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향유를 위한 경제적 측면이다. 그것은 문화시설의 구비만으로 문화 향유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일정한 비용의 지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문화이용도는 문화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이용하는가의 문제로 문화 향유자의 문화인식이나 태도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세종시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연관시켜 문화격차의 현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4) 대한민국 미래 50년 '세종시' 출범 D-30, 아시아경제, 2012.06.01.

5)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중심의 경제 도시로 전환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 당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계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박용치,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제10권, 2003.

7) 조권중, 『서울시민의 문화 격차 :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시정책개발연구원, 2004.

8) 신현택,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9) 장혜미, 김재범, 『문화격차의 기존 개념과 정책적 인식의 한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 (1),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세종시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면 조치원읍을 포함한 구도심인 읍면의 인구는 95,184명(28.2%)이고, 신도심인 동의 인구는 242,461명(71.8%)¹⁰⁾으로 넓은 면적에 비해 70%이상 신도심에 인구가 모여 있다.

〈표 1〉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19.08	337,645	169,203	168,442
조치원읍	45,002	23,222	21,780
연기면	2,727	1,532	1,195
연동면	3,617	2,023	1,594
부강면	6,613	3,655	2,958
금남면	9,282	4,983	4,299
장군면	6,908	3,948	2,960
연서면	7,906	4,304	3,602
전의면	6,358	3,433	2,925
전동면	3,955	2,188	1,767
소정면	2,816	1,538	1,278
한솔동 ²⁾	19,405	9,553	9,852
새롬동 ³⁾	50,828	24,686	26,142
도담동 ⁴⁾	32,446	15,715	16,731
아름동	23,950	11,816	12,134
종촌동	30,026	14,516	15,510
고운동	33,371	16,261	17,110
소담동	24,193	11,920	12,273
보람동 ⁵⁾	17,888	8,795	9,093
대평동	10,354	5,115	5,239

주 : 2)가람동 포함 3) 나성동, 다정동 포함 4)여진동 포함 5)반곡중 포함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

이같은 인구 집중현상은 신도심이라는 기획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정부행정부서의 집중화에 기인한 것이다. 조치원읍의 경우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의 철도 교통망과 오랜 기간 읍으로 유지되며 갖추어진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다른 읍면과 달리 인구 집중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조치원읍 등 구도심 대부분은 농촌 지역이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문화시설만으로 전체 시민의 절반을 넘는 신도심 주민들을 흡수해서 만족시킬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신도심의 문화시설 역시 공공시설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에 우선 순위를 빼앗겨 신도심 역시 문화시설이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세종시의 문화 기반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문화 수요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의 핵심

10)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세종통계월보(2019.09) 참조.

은 지역균형발전의 부조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도시 역할을 제고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의평등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에 작성된 『제6회 세종통계연보(2017년 기준)』에 의하면 세종시의 문화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1(조치원읍)	미술관	없음	시민회관	1(조치원읍)	문화회관	1(조치원읍)
민간 공연장	없음	화랑	없음	종합복지회관	없음	국악원	없음
영화 상영관	1(조치원읍 : 스크린수 5)			청소년회관	없음	전수회관	없음
	1(한솔동 : 스크린수 2)						
	1(종촌동 : 스크린수 7)						

공공도서관

8개소(국립세종도서관, 한솔동도서관, 도담동도서관, 아름동도서관, 종촌동도서관, 고운동서관, 보람동서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문화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조치원읍에 건립되어 있던 공공공연장과 시민회관, 그리고 문화원 각 1개소가 문화시설의 전부이고, 그 외 전시실 및 문화복지시설은 거의 없다. 문화 예술행사 관람률 중 관람률이 가장 높았던 영화 분야만 보더라도 세종시 전체에 영화상영관이 3개 뿐으로, 인근의 도시에 비해 인구 대비 영화상영관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Ⅲ. 세종시 문화격차 해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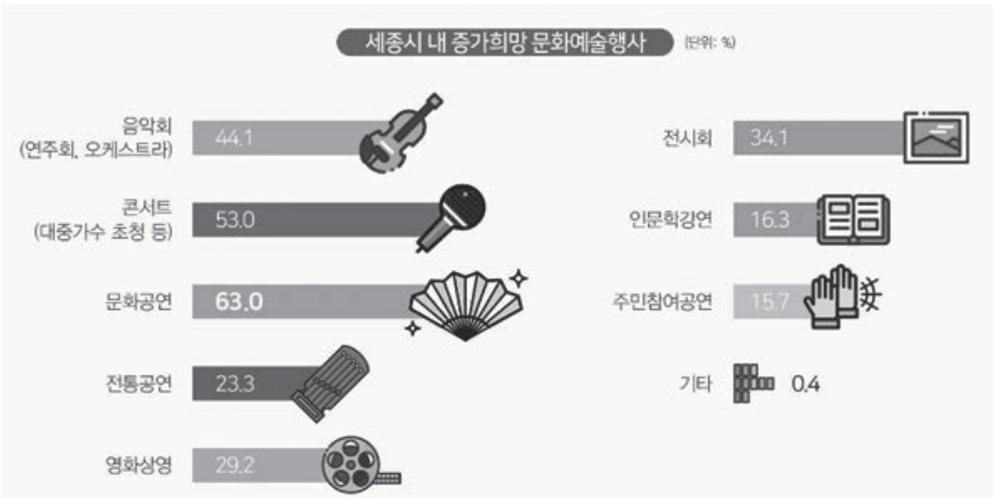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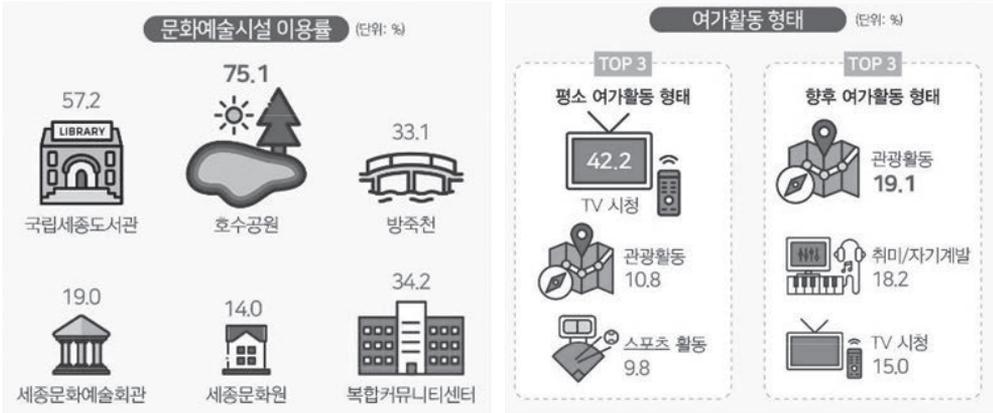
앞서 문화격차를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문화격차는 발생 원인이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소 방안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확충의지를 통해 문화 인프라의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문화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문화의식을 고양시키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접근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의지이다. 세종시는 2012년 8개이던 문화시설이 2019년 5월 현재 16개로 다소 늘었고, 신도심의 각 동에 건립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제반 문화예술시설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긴 하다. 특히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려는 세종시의 문화비전 아래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지역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2019년)과 시청자미디어센터(~2020년) 구축, 그리고 세종아트센터(~2021년)와 향토유물박물관(~2022년) 건립 등을 통해 호수공원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시설 이용의 범위가 넓혀질 것이다. 특히 2018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¹¹⁾에 따르면 세종시 시민들의 경우 문화공연, 콘서트, 음악회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문화기반 시설이 계획한대로 확충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형태 역시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그 공간활용에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최적의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주도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용이 아니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주민자치를 통한 센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201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세종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는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획공연(월1회)과 길거리공연(주2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아트트럭, 세종인문지리학교, 여민락아카데미 등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역사문화의 자원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구현하고자 세종시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를 육성하고 김중서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조성(~2021년),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2022년), 이성 등 성곽문화재(33개소)의 관광자원화 및 향교, 서원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계획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특정 문화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공간활용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여가활동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2019년 세종시 예산(1조5,516억원)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이 543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3.5%정도라면 향후 상기 언급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11) 세종의 사회지표(<https://www.sejong.go.kr/bbs/R0184/view.do>) 참조.



다음으로 문화의식을 고양시키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접근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세종시에서는 여러 인문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인식 재고에 힘써 오고 있다. 또한 세종시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신흥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시민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2015년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기획하고 개발한 <세종인문지리학교>¹²⁾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세종인문지리학교는 한 해동안 4기에 걸쳐 운영되었다. 각 기수의 월별 운영과 교육 세부 일정 및 주제를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

12) 보다 자세한 세종인문지리학교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안남일,이문성, 「세종특별자치시 인문지리교육 콘텐츠 연구」, 『인문사회21』9권6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회차	일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소요 시간
	연월일	시간		형태	내용	
1	06/27 (토)	13:00 ~ 16:00	개교식	강연	• 개교식 • 세종인문지리학교 소개	1
				특별강연	• 특별강연 :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2
2	07/04 (토)	10:00 ~ 17:00	백제가 살아있는 세종시	강연	역사 속 백제 부흥 이야기	2
				답사	백제를 찾아가는 길	4
3	07/11 (토)	10:00 ~ 17:00	세종을 기억하는 세종시	강연	세종과 세종시	2
				답사	세종을 기억하는 길	4
4	07/18 (토)	10:00 ~ 17:00	국난을 극복해 온 세종시	강연	전쟁과 국난 극복의 정신사	2
				답사	국난 극복의 길	4
5	07/25 (토)	10:00 ~ 17:00	미래를 창조하는 세종시	강연	미래를 창조하는 세종시의 역할	2
				답사	미래를 창조하는 길	4
6	08/01 (토)	13:00 ~ 16:00	수료식	특별강연	• 특별강연 : 지역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에서의 삶	2
				수료식	• 수료식(상훈 및 간담회)/설문 조사/기념품 증정	1

제한적인 지면 탓에 제2기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매 기수는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6회차 교육을 시행했다. 다만, 개교식과 수료식의 특별강연¹³⁾의 강연자와 세부 주제가 다소 달랐을 뿐이다. 아울러 강연의 경우는 강연자의 사정에 따라서 내용이 보완된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한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세종인문지리학교는 한 기수별로 6회차 6주에 걸쳐서 주중 토요일 오전(10~12시)과 오후(1시~5시)를 활용한 총 3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입학식과 수료식을 제외하고 동일 기수의 참가자는 토요일 오전의 강연과 오후의 답사를 함께했다. 답사는 우천과 혹서(8월)에 따라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일부 답사 지역을 변경하거나 대체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개의 교육주제(①백제가 살아있는 세종시/②세종을 기억하는 세종시/③국난을 극복해 온 세종시/④미래를 창조하는 세종시) 아래 강연과 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강연에서 미시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매 기수별 교육자료집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지향을 보였다.

13) 문화유산 사랑하기(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세종특별자치시장)/새처럼 살다 새처럼 간 화가(양주시립장 육진미술관 운영자문위원)/문화와 인문학(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회장)/지역발전과정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답사는 교육주제에 맞춘 동선으로 이루어졌다. ‘백제가 살아있는 길’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백제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세종을 기억하는 길’은 세종이 눈병을 치료한 전의초수와 그의 후손과 관계된 충신·지사의 유적과 유허지로 구성되었다. ‘국난 극복의 길’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적지와 전쟁 유공자 관련 지역을 다루며, ‘미래를 창조하는 길’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과 행정의 주요 장소를 답사하였다.

이러한 세종인문지리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세종시문화재단의 자체 사업 일환으로 설계된 〈세종지리아카데미〉의 모델이 되었다. 세종인문지리학교의 실무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가 세종지리아카데미의 진행을 맡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전문 연구자로서 진행뿐만 아니라, 세종지리아카데미의 세부 지리 탐방 동선을 답사하고 재구성하며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세종인문지리학교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현학적 학술 분위기를 탐방 체험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구성 방식을 구축하여 세종지리아카데미는 세종인문지리학교의 보완과 지속성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변모하게 된다.

비록 사업 명칭은 다소 변화를 주었으나, 프로그램 진행에 여전히 대학의 전문 연구 인력을 활용한 점에서 세종지리아카데미는 세종인문지리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만하다. 세종지리아카데미는 세종인문지리학교에서 보여준 장점(지역의 지리답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현학적인 인문 강연)을 보완해서 육성화 단계(2017년~2018년)를 거쳤다.¹⁴⁾

이처럼 세종인문지리학교의 경우를 보면, 지역 소재 대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콘텐츠의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이를 지역 문화재단은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대학과 지역 문화재단의 상보적인 역할과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서, 학·관(學·官) 협업의 역할 모델로서 세종인문지리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14) 사전적인 의미로서 ‘답사(踏査)’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을 일컫고, ‘탐방(探訪)’은 ‘명승고적 따위를 구경하기 위하여 찾아감’이다. 용어의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세종인문지리학교는 학술교육적인 목적의 답사를 지향하고, 세종지리아카데미는 체험교육적인 목적의 탐방을 지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지리아카데미에서는 시민 참가자들을 위한 체험교육이 강화된다.

IV. 결론 및 정책 제언

본고에서는 세종시의 문화격차 현안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종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의지와 문화의식을 고양시키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접근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의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세종시의 계획을 점검하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세종시의 경우, 문화기반시설은 굳이 인접 도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세종시 시민들의 기대 수준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세종시의 발전 속도와 세종시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종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문화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사안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제는 세종시의 비전 아래 시정가치로 삼고 있는 균형발전과 품격도시를 근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일회적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검토가 있어야 하고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구축될 때 세종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수준을 높여 문화적 요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방안들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각 읍면동 지역민이 일상 속에서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세종시 관련 현황텍스트와 통계자료만으로 살펴본 점과 세종시 문화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실태와 세종시 시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못함은 본고의 한계로써 차후 보완을 요하는 부분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 세종시(<http://www.sejong.go.kr>)
 - 세종시문화재단(<https://www.sjcf.or.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www.mois.go.kr/irt/sub/a05/totStat/screen.do>)
 - 세종의 사회지표(<https://www.sejong.go.kr/bbs/R0184/view.do>)
 - 세종소개(https://www.sejong.go.kr/kor/sub01_040101.do)
 - 세종통계(<https://www.sejong.go.kr/stat.do>)
 - 세종통계월보(2019.09)
 - 대한민국 미래 50년 '세종시' 출범 D-30, 아시아경제, 2012.06.01.
 - 박용치,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제10권, 2003.
 - 조권중, 『서울시민의 문화 격차 :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신현택,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장혜미, 김재범, 「문화격차의 기존 개념과 정책적 인식의 한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 (1),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 안남일, 이문성, 「세종특별자치시 인문지리교육 콘텐츠 연구」, 『인문사회21』 9권6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문화적 도시재생과 대전의 문화적 기반

김종법 대전대학교 교수

문화적 도시재생과 대전의 문화적 기반

김 종 범 대전대학교 교수

DAEJEON
SEJONG
FORUM

I.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2019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고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시행했던 문화관광정책과는 확연하게 다른 도시 활성화정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지역의 핵심적인 콘텐츠를 문화에 집중시키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문화적도시재생의 의미는 공공 공간의 문화적 장소 가치 생성 및 정책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전국의 낙후된 원도심 혹은 특정 공간 19곳을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였다(〈표1〉 참조). 전국적인 고른 선정으로 지역적인 특혜 논란이나 특정지역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표 1〉 2019년 문화적도시재생 선정 사업지

지자체	위 치	주요 사업	비고
경 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구도심	〈맷돌모루〉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하다 •마석우리 문화공작소, 문화포털잡지 '맷돌모루' 발간	
경 기 동두천시	생연동 604 일대	〈동두천 문화터미널〉 •문화 아카이빙과 전시 프로젝트, 평화루트 개발	
경 기 하남시	신장 1동 일대	〈다시 찾은 문화路 신장 777〉 •시민참여 '잠깐 노는 학교', '문화공간 빈집'	
강 원 강릉시	중앙동 서부시장 일대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주민커뮤니티 '다섯개의 방'(다방, 책방, 주방, 규방, 점방)	

지자체	위 치	주요 사업	비고
강원 춘천시	약사동 25-4번지 일대	〈도시를 잇는 ‘터무니*’) *터를 잡은 자취 터+무늬 •마을공방 ‘터무니 연구소’, 여행 ‘터무니 안내소’	
강원 태백시	철암동 366-46 철암역일대	〈태백 역사·문화 장터 만들기) •철암탄광역사촌, 쇠바우골 탄광 문화장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및 사직동 일대	〈세대-장르 간 문화 연결) •생활문화 창업 지원, 일일요리, 문화연결 공간 조성	연속 사업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대	〈사람이 심고 꽃이 답하다) •문화적 가드닝 ‘꽃심장터’, 선미촌 마을숲 조성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일대	〈금오시장로, 문화로 리-디자인하다) •시민다방, 금오시장로 예술축제, 사랑방 운영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여천동 일대	〈포항 문화적 도시재생) •청포도다방, 지역재난활동가 육성, 나루터 문화놀이 창고	
경남 밀양시	밀양시 밀양대로 1853 일대	〈진장(陣場)거리, 문화예술의 진(陳)을 치다) •밀양강문화예술의 거리전, 상가 아트스테이 운영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33-4 일대	〈화원청춘 옥상실험실) •화원시장 옥상을 활용한 지역민 문화활동공간 조성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문화생산도시 리빙랩)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 운영, 문화재생포럼	
부산 부정구	40계단 주변 및 동광동 일대	〈시민주도형 예술교육도시 플랫폼 중구) •청년도시기획가 프로젝트, 중구예술교육영화제	
부산 영도구	영도구 전체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영도 이야기학교, 생태도감, 절영마(horse) 조형물 설치	연속 사업
인천 서구	원적로 및 장고개로 일대	〈문화더하기+) •지식공유 ‘코스모40 아카데미’, 공장 속 ‘북클럽’	
광주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대	〈달외 달팽이 문화마을) •청소년 골목 조사단, 달외마을 골목 학교, 역사박물관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일대	〈공동예술마당) •두레마당 ‘누구나’ 숲, 예술로 예술창업 키움관 조성	
대전 대덕구	한남로 88번길 일대	•콘텐츠팩토리 조성, 88패션 카니발, 무지개축제	

자료 : 필자 정리

대전 지역에서는 대덕구의 한남로 88번 길 일대가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를 88번 길에 부여하고 뉴트로의 복고 경향을 반영하여 특화시킨 사업을 내세워 선정될 수 있었다. 선정된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역시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를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특화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란 규정되거나 정형화하지 않은 유연하고 특화된 지역만의 문화자본 혹은 문화

환경을 도시재생의 원칙과 특성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가능케 하고, 동시에 사업이 성공하려면 문화적 도시재생의 기본 여건과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과 시각에서 대전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와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하나는 문화재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도시재생의 의미를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 대전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추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전에 적합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조건과 문화자본의 축적 방식 및 도시재생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고, 여전히 진행형인 미래 대전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정책적 방향과 내용을 제안해 보겠다.

II.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 여건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등장 배경에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지부진했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도시재생사업의 협업사업 성격을 갖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원도심 혹은 쇠락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유형화(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에 적합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대상 지역들이 제안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의 대부분은 문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5가지 사업 유형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이 소외되거나 밀려나지 않는 방식이 핵심 원칙이 되면서 해당 사업 지역 대부분은 문화와 관광 혹은 특화지역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관광체육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입안하고 시행하고자하는 연계사업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다. 따라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여건이나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굳이 문화가 무엇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문화가 갖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문화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축제, 벽화, 박물관이나 예술전시장 혹은 문화상품이 많거

나 중심이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문화를 단순히 예술이나 음악 혹은 연극이나 영화와 같이 공연이나 작품 중심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결국 다양한 문화 소재를 통해 해당 문화에 대한 인식과 콘텐츠가 기반이 되는 환경과 여건이 '문화적'이라는 의미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기반과 여건 위에 한 지역의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거주민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복원하고 살려낸다는 것이 오히려 '문화적 재생'의 핵심적인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적 재생'사업을 입안하고 선정되어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와 조건이 필수적이다. 물론 사업 선정의 최종권한이 있는 책임부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전문성과 공정함의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대전광역시로 범위를 제한하여 본다면 다음의 네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전의 문화자산과 기반에 대한 정확하고 분석적인 연구와 기초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전은 근대 및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다양한 지역적 기반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문화를 발굴하고 재생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자료가 준비되어야 문화적 재생을 제대로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나 자료 없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계획하여 제출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대전의 여러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문화적 재생지역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작업과 분석은 단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만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면서 대전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자 노력이기도 하다.

둘째, 문화적 기반과 여건에 대한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종사자들의 인식과 사고의 유연한 변화이다. 이 문제는 단지 대전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를 대하는 방식이나 인식이 다소 편협하기도 하고, 예술이나 공연 중심의 특정 분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시재생의 의미를 도로정비나 건축 시설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외형적이고 시각적인 방식의 변화나 접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를 특정한 형태의 시각적인 작품이나 공연으로 보기보단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방향에서 인간과 거주 환경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도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영입(혹은 양성)과 전문직종의 채용 개방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대전시뿐만 아니라 구청 등에도 도시재생관련 국이나 실이 존재하고 산하기관도 전문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

는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나 행정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무정형적인 특성과 자유롭고 무한한 상상력이 기반해야 발전할 수 있는 문화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독창적이고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강화나 몰락하고 있는 지방의 부활을 위해서도 분명 필요한 전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과 경기 역시 지방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이나 경쟁력 없는 문화자본과 전문가의 부재와 약화는 향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자생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국책사업 수주와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경쟁력을 키우고 문화자본을 끊임없이 발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과 준비가 절실하다.

덧째, 대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혹은 문화 관련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와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내실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과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진정한 문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장기적인 방향에서 정책과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할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단선으로 종료되거나 새로운 국책사업이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함께 사장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 지연이나 학연 등에 매몰되지 않은 광범위한 인적 풀의 문화네트워크와 전문가 그룹 형성 등이 필요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 중심의 문화산업이나 지역특화가 아닌 해당 공동체나 시민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대전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모델 제안

1) 개요

대전이라는 도시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도 쉽게 정체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삼국에 의해 번갈아 통치받던 곳이며,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인 전통 질서 아래 양반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곳이다. 또한 조선 이후 일제 강점

기 철도 건설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근대도시의 성격을 갖기도 하며, 현대로 들어서면 1993년 대한민국 최초로 EXPO를 개최하여 과학도시의 성격을 갖는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시대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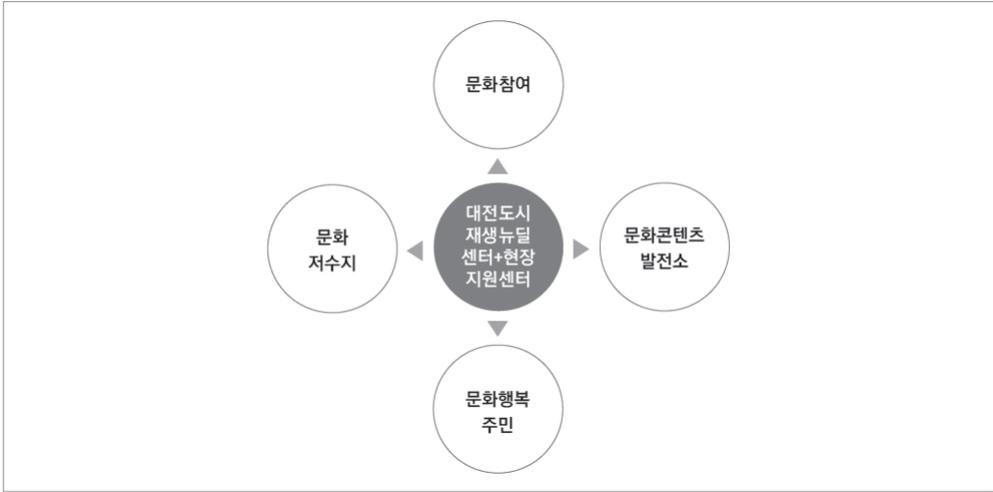
복합적이고 역사적인 과적이 다양한 도시 공간의 특징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합한 문화적 토양과 공간을 보존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대전은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도 앞서 언급한 한남로 88번길 일대가 선정되어 지속적인 사업 기획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대전의 도시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문화자본의 축적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항에서는 문화자본의 토대 위에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전에 적합한 모델을 하나의 사례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2) 대전의 문화적 재생 개념과 모델

복잡한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대전에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적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재생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대전 소속 5개의 자치구마다 문화적 기반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선불리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적 재생 개념과 이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전시에서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가장 먼저 논의할 것은 대전의 문화적 재생 개념과 가치 및 목적 등의 기본 체계이다. 문화적 재생의 경우 사업의 주체와 대상 및 목적 등이 분명히 드러나야 사업 추진 방식과 문화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갖는 성격상 사업 시행의 주체는 대전시 혹은 자치구가 되겠지만, 사업을 직접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문화적 재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해보겠다.

이에 따라 문화적 재생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며, 거주 지역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주민자립형 문화재생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문화 참여를 가장 중요한 개념과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주민참여를 전제로 주민들의 문화소양이나 욕구 등을 담아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발전소가 필요하며, 이를 재생산하는 문화 저수지 역할의 기관이나 협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주민으로서 행복한



〈그림 1〉 대전 문화적재생사업의 문화적 재생의 개념도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적 재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형성된 대전의 문화적 재생 개념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물론 대전 지역 5개 자치구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으로 다른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5개 구의 모든 문화적 기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자칫 무모해보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화적 재생의 의미를 개념과 내용을 통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델의 모색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장에서 모색하게 될 대전의 문화적 재생 모델은 DCF(Daejeon Culture Factory)모델로 문화적 재생이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로 끊임없이



〈그림 2〉 대전문화팩토리(Daejeon Culture Factory)형 모델(6가지 속성)

재생산될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DCF모델은 6개의 밀접한 연계성과 연속성을 가진 요소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스스로 만드는 문화공간’, ‘문화콘텐츠발전소’, ‘문화저수지’, ‘문화네트워크 서버’, ‘지역문화 깃대종’, ‘대전도시재생사업 앵커’를 말한다.

첫 번째 요소인 ‘스스로 만드는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화마을 만들기 위한 역량과 의지를 의미한다. 문화적 재생의 주체가 주민이어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표명하는 요소이며, 호모쿨투랄리스(Homoculturalis)란 스스로 만드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주체로서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

두 번째 요소는 ‘문화콘텐츠 발전소’이다. 이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내는 문화콘텐츠를 동력으로 다양한 연계 상품과 활용 가능한 다른 대체제로 만들어 내는 주민들의 문화 동력소를 의미한다. 주민들의 공간을 환히 밝혀주는 전력원 역할을 하는 장소의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 요소는 ‘문화저수지’이다.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문화발전소를 통해 유통되고 사용되는 다양한 사물과 상품 등이 축적되고 기초를 쌓아 토대를 구축하고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네 번째 요소는 문화네트워크 서버 개념의 요소이다. 하나의 지역 안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 재생의 주체들과 생산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는 문화서버의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특히 문화서버의 역할이 가능한 상징적인 공간이나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상징과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요소는 지역문화 깃대종¹⁾ 개념의 요소이다. 하나의 지역 문화를 보전하고 지킬 수 있는가를 가능하는 지표가 되는 대표적인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 깃대종을 발굴하고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문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하며, 이는 굳이 축제 혹은 이벤트로 유형화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대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노잼 대전을 유잼 대전”으로 만들기 위한 대표성을 담보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섯 번째는 대전도시재생사업의 앵커 개념의 요소이다. 문화적 재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중심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망망대해를 향해하는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한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 흔들리지 않는 계획과 중심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치적이고 지엽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모든 지역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문화성장

1) 깃대종이란 원래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과 발전이 가능한 핵심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6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 대전문화팩토리(DCF) 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다음의 6가지 단계(주민친화문화→주민참여문화→주민창작문화→주민자립 문화→주민향유문화→주민행복문화)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도시재생을 영위할 수 있다. 대전 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6단계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대전문화팩토리(DCF) 모델의 문화적 재생 단계

지금까지 제시한 DCF 모델을 통해 대전의 문화적 재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생활과 삶이 행복해지는 재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 시민으로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체성을 통해 대전만의 독특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모델이다.

특히 대전 거주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주민친화적인 문화재생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되고 시행되는 주민 참여형 문화재생의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본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문화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자립형경제 문화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지속성 있는 계획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담아 DCF 모델에서 각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문화재생 사업을 제안하면 다음의 〈표2〉의 단계별 사업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DCF모델 실현을 위한 단계별 사업 예시

사업 분류		세부 내용
DCF 문화기획 프로그램	주민친화 문화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가 있는 문화강연 시리즈 기획 나를 깨우는/만드는/알리는 문화강좌 시리즈 개설 지역문화 관련 유튜브방송국(지역문화원+대학+초중고+주민조직)
	주민참여 문화기획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문화팩토리 페스티벌 : 다양한 문화콘텐츠의장터로 기획 상설문화경연장(CULTURE) : 문화원형극장형태 원하는 참가단체의 신청에 따른 문화공연, 전시, 상영 등의 기회제공

사업 분류		세부 내용
DCF 문화기획 프로그램	주민창작 문화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창작페스티벌: 유아글짓기경시대회, 유아그림경시대회 어르신작품전 대전의 사계 사진전 대전문화홍보 UCC경연대회 스마트폰 영화제: 스마트폰 자체제작 단편/다큐멘터리 정기상영
	주민자립 문화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전래 구연문화사 사업 대전 근대도시 조성사 연구 프로젝트 : 대전의 살아있는 역사 (거주 주민 등의 증언을 통한) 구술사 프로젝트 대전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특정한 각종 박물관 프로젝트 자연친화행복마을 프로젝트 (대청호와 대전 주변 산들을 활용한 자연친화프로젝트)
	주민향유 문화기획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만드는 대전 프로젝트 문화시네마(CULTURE CINEMA): 야외영화관 개설(특정 주제 정기상영) 대전 소재 4개의 주요 산과 대청호를 잇는 둘레길 조성 프로젝트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한 행복한문화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경제자립공동체와 문화향유공동체의 결합

이러한 사업들은 유형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화는 시기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표3>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세부사업 유형과 추진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표 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세부유형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 유형	사업성격	사업예시	추진방법
청중형 주민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공연이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업 및 각종 강좌들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주민합창경연대회 대전주민체육대회 주민들이 기획하는 문화 등등 	- 강좌 개설, 주민 설문조사에 따른 문화공연, 대회, 강연 등
공모 및 전시형 주민사업	각종 공모사업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들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어린이집 창작페스티벌 대전 어르신작품전 대전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 등등 	- 어린이집 대상으로 참여 유도 - 대전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참여 유도 - 대전 지역 내 초중고학생 참여 유도
주체형 주민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사업 및 자생력을 기르는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만드는 대전 대전 문화프로젝트 자연친화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등 	-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대전의 문화정체성 요소 가미 - 1가게 1화분 가꾸기 - 골목길을 사계절 꽃이 피는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
이벤트형 문화사업	정기성 혹은 비정기성을 갖는 문화이벤트 유형의 사업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UCC공모전 대전사계절사진전 대전홍보포스터전 등등 	- 대전 소재 주요 대학 재학생과 주민들의 공동창작 유도 - 대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조직과 연계 - 대학생과 초중고교생 참여 유도

지금까지 살펴본 DCF 모델의 다양한 측면과 추진방법 등은 하나의 사례에 해당할 뿐이다. 5개의 자치구 유형에 따라 이러한 예시와는 다른 유형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전이라는 도시의 특징과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5개 자치구의 문화적 기반과 역량 및 환경 등에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중심이 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적 도시재생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문화의 획일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문화의 속성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대전시 전체의 조화로운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과 준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IV. 대전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대전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가치 및 DCF 모델 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이 당면하고 있는 문화적 기반과 여건 및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대전을 문화적으로 특정화하여 규정한다는 작업이 쉽지 않음에도 미래의 발전적인 대전을 위해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은 충분히 각인되었을 것이다.

대전시 산하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문화정책 투자 비율 등에서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대전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적 재생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한상헌, 2017). 더군다나 대전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이 사안과 분야에 따라 너무 다르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특화된 문화적 재생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현재 대전은 위기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도 있지만, 혹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끝없는 퇴보와 퇴행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간 전임 시장들의 수많은 노력과 현 허태정 시장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대전의 문화적 토대와 기반을 확장하고 심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구태나 폐해에 젖어 있거나, 정체되었던 퇴행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문화적 재생이 아닌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전통도 중요하고 기존 질서나 구조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문화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성관념과 개념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문화의 깊이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대전의 새로운 자양분이 될 문화자산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전은 문화적 토양을 이루게 될 자양분과 토대가 5개 자치구 곳곳에서 빠져나올 틈을 엿보고 있다. 대전은 조그마한 자극이나 계기만 주어진다면 활짝 열 수 있는 특유의 문화자산과 문화토대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문화광산 같은 곳이다. 누군가는 그냥 일상의 관습처럼 스쳐갔던 곳과 흔적들이 온 국민이 원하고 바라던 문화로 꽃피울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도시이다.

과학문화도시, 역사와 전통의 도시, 교통의 요지이자 통일한국의 중심지, 행정복합도시 세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철도의 본산 등 수많은 특징들로 구성된 문화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게다가 대청호를 끼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이며, 도시를 둘러싼 주요 산들이 도시의 자연경계를 만들고 있는 천혜의 친환경생태도시의 가능성도 무한한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적 재생을 통해 대전을 성장시키고 더욱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자세로 대전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축적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작업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전학의 관점에서 대전 지역만의 특화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문화스토리과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전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저 퇴락한 지역으로만 알고 있는 근대의 흔적들을 '대전문화유산지구'(가칭)로 발전시켜 집적된 문화거리 혹은 문화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낙후되고 정체되어 있는 동구의 정동 인쇄거리를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의 협력을 통해 남부의 현대 출판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거의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은행동 지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거리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네 하나가 하나의 거대한 영화 세트장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무궁한 문화콘텐츠와 문화공간의 열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문화적 재생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의 초반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나친 관료주의나 엘리트가 주도하는 문화적 재생은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나 결과 중심의 행정관료들이 문화재생을 주도하게 된다면 문화의 특성을 살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의 문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행정관료나 지방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최저한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제 정책이나 도시 정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의 미래를 위한 문화자산과 자본축적에 아낌없는 투자와 배려가 필요하다. 문화전문가는 다른 영역에 비해 육성에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의 가부 여부가 가시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전문가 육성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다면 장기적인 문화정책은 요원해지며, 이는 유행과도 같은 문화 혹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작정 따르는 트렌드 중심의 천박한 문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전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주민과 시민 스스로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갖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대전 주민 스스로 주변인에 머물지 말고, 내가 만드는 대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가와 관심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도균, 정선기.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 김상열. 2012. “대전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영주어문』(제24권)
 - 김선건. 2002. “대전문화의 성격과 문화운동”. 『사회과학연구』(제13권).
 - 신희권. 2003. “지방정부 문화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대전 첨단문화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 한상헌. 2017. “대전도시정체성재정립연구 3.4”.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 원도심의 '사라지는 흔적들과 문화적 장소성'

이상희 사단법인우리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전 원도심의 '사라지는 흔적들과 문화적 장소성'

이 상 희 사단법인우리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DAEJEON
SEJONG
FORUM

I. 도시의 기억과 흔적

도시는 다양한 삶에 흔적이 층을 이루며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다양한 문화형태로 갖고 있는 공간이다.

대전 원도심의 모습은 개항후 새로운 문화와 산업시설의 수용으로 도시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개항 전 대전은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한촌에 불과했지만, 철도로 인한 교통의 발전은 도시 산업구조를 2·3차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에 근대기 신문화가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통시설의 구축, 시가지의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공간구조의 틀이 이 시기에 형성되고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32년 도청의 이전과 함께 인구 증가와 시가지 확장으로 가로공간은 새로운 건축양식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근대도시의 경관을 만들어 냈으며, 이후 90여년간 현 원도심을 중심으로 대전은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도시의 주요 기능이 둔산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의 경제와 문화 등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구의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방행정을 이끌던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근대도시역사에 연속성을 대변하던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에 주요기능이 전용되면서, 재개발이나 활용의 방법에 따라서 멸실 또는 기능 변경의 선택이 불가피해졌다.



〈그림 1〉 도시형성 이전에 대전의 지리적여건

대전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 형성에 있어서 근대시기에 형성된 비중이 상당히 크다. 경부선 철도개통(1905년)을 시점으로 한 형성기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1932년)이 가져다 준 도심 확장기,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전후 재건기(195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진행된다.

대전의 도시역사에 대해 사용자에게 각인되지 못했던 '정체성'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화유산의 멸실과 훼손은 도시역사성의 단절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나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향유와 학습, 체험의 기회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공간과 같은 문화자산은 문화체험이나 관광은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다양한 모습으로 흔해져 있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건축물이나, 도시경관 등 그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문화체험이나 관광은 탈근대사회에 핵심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

II. 도시형성의 인자(因子)로서 근대건축의 의미

대전은 도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문화 환경의 변화가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도시발전과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가 갖는 정치나 경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 규범, 상징, 그리고 건축물 등과 같은 유무형의 산물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의 문화환경이란 개인 혹은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포괄적인 문화적 여건

들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이나 도시에 대한 정체성은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관적인 성질'의 것이다. 개인 혹은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의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대전'나 '대전시민'에 대한 인식은 지역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구 또는 동단위의 소지역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대표적인 정체성이냐 할 때에는 분포도 또는 평균적인 의미에서 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산업화 이후 새로운 도시면모를 갖추기 이전에 근대사 속에서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원도심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대건축의 분포도나 평균적 의미에서 그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전의 도시이미지는 무엇인가?' 대전을 홍보하는 많은 주제어에는 '과학도시'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철도'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정책적 목표에서 본다면 모두 다 좋은 어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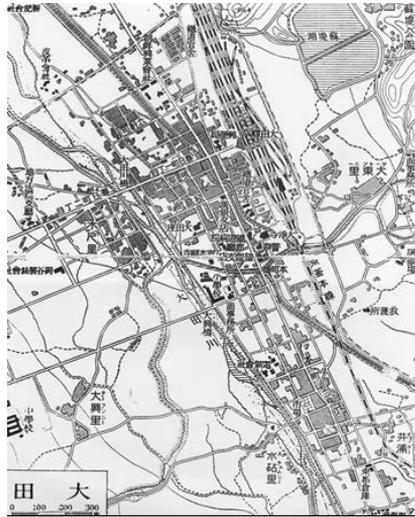
다만 역사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즉 대전의 역사나 독특한 문화의 실체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적어도 지난 120여년간 도시에 새겨진 흔적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조성된 대덕연구단지가 과학도시로서 대전만이 갖는 이미지일까?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도시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 지역갈등이 조장되기도 한다. 이제는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타이틀마저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란 어휘의 의미에 명확성이 떨어지고, 근대 이전의 역사나 문화적인 자산이 고도(古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은 전통과 융합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는 지역 역사를 격하시키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통이라고 시기를 구분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고 형성된 자원이 적다는 이야기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과정 이전의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다. 빈약한 자원을 융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현실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역마다, 그곳의 고유한 문화성(文化性)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문화적 의미가 강한 건축물 하나가 그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건축물에는 지역문화와 연관된 건축적 개념과 역사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지역건축의 개념적 근거와 의미의 폭은 다양하고 넓다. 지역의 전통적 맥락이나 시대적 맥락, 또는 종교적 맥락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전개된 역사적 과정이나 경험, 지역사회의 현실과 연관된 시사적 측면 등 다양한 관계성에서 비롯된 독특한 건축의 의미는 지역의 문화적 텍스트로 읽어나

갈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형성되고 이어져 온 가치와의 다양한 사람이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성을 담은 공간이 형태로 구체화된 것을 '지역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에 대한 고민은 건축문화적 연속성을 재확립하고 그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 물리적 문화유산, 역사적 경험과 사건, 생활양식과 같은 유무형의 근대사적 흔적들은 개념화를 통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과거가 읽혀진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시대를 뒤로하고 문화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와 삶에 흔적으로서 건축문화가 주는 문화적 생동감과 지역성을 표현해 내는 것은 도시의 개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2〉 1910년대 초기 대전시가지 지도

대전의 도시형성과 그 구성인자로서 건축물 구축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지방제도를 개혁하는데 이때 공주부의 소속이었던 회덕과 진잠은 각각 군으로 승격하게 된다.¹⁾ 당시 대전의 모습은 그저 '한촌'에 비유될 정도다.

현재 대전시의 일부인 회덕과 진잠은 객사와 향교 등이 위치한 지방행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철도가 대전을 통과하면서 회덕군 산내면 및 외남면 일부가 통합되고 대전면이 형성되면서 이후부터는 역(逆)으로 대전 원도심의 확장에 따라 1980년대 행정구역개편과 대전의 광역화에 의해 회덕과 진잠이라는 전통마을이 대전시에 편입되고 지금의 대전이라는 공간적 범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된다.²⁾

1)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대전100년사1편』, 대전광역시, 2002, 260쪽

2) 조선시대에 대전지역은 공주목 직할의 일부와 회덕현, 진잠현의 영역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한밭이라고 불리며 회덕현의 일부였다.

도시의 생성에 대한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존의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쉬운 것은 원도심의 형성이 근대기에 이루어졌다는 시대적 배경과 이후 한국전쟁, 산업화 정책에 밀려 이전의 도시민들에 의해 축적해 놓은 근대유산과 역사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축물과 가로 공간 같은 가시적인 도시이미지의 구성요소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공간과 장소를 구성하고, 삶을 재현하는 담론의 대상물이 함께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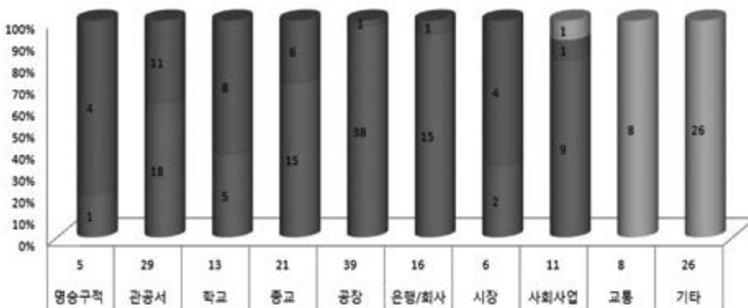
Ⅲ. 대전 원도심의 변화와 근대유산의 형성

『대전군군세일반』에서 보면 1928년까지 대전의 도시 개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주요시설의 구분은 관광,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공장, 은행 및 회사, 시장, 상회사업(조합), 교통으로 나누어져 있다.

1920년대까지 원도심에 분포한 주요 시설물을 보면 새로운 근대산업과 문화를 수용하는 용도의 시설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군군세일반』에 나타나는 1928년 원도심의 주요 시설물 분포를 보면 총 174건이 소개된 가운데 이 가운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78개의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명승구적으로 분류된 대상 중 태봉산(현, 금산 추부면 일대), 유성온천, 계룡산이 소개되고 있다. 관공서는 대전군청을 비롯하여 18개시설이 원도심 대상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중 경찰관파출소는 본정2정목과, 대전정거장(대전역), 춘일정2정목 등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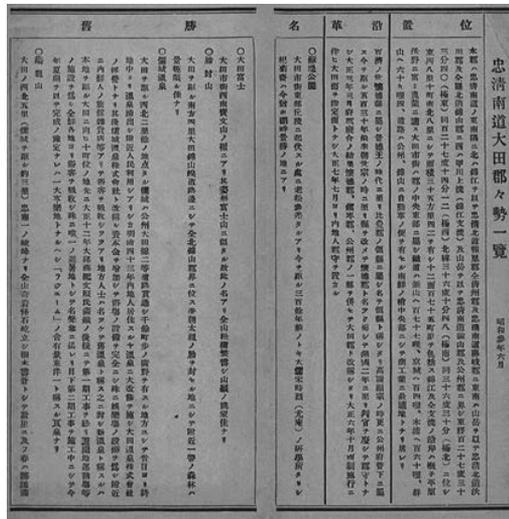
대전군에 13개 학교 중 5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가지형성과 인구유입 이전에 회덕과 진잠, 유성, 산내 등 각각에 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역별 분포도로 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의 분포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1928년 『대전군군세일반』에 나타나는 주요시설 분포

종교시설은 신흥도시라는 특성과 일본인 위주의 외국인 거주 분포를 봤을때 그 비율이나 종교에 있어서, 비교적 전통 사찰이나 민족종교와 같은 토착종교 보다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와 서양의 개신교, 천주교 교회의 분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총 21개의 종교시설중 대상지역에 위치한 시설은 15개소, 70%에 가까운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지에 분포된 종교는 불교시설이 대부분이다.

공장 및 회사·은행시설은 근대도시 대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다. 1차 산업 위주에 전통적 산업형태가 경부선개통 이후 형성되는 시가지의 모습에서 대전의 산업구조가 2·3차 산업으로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교통과 기타를 제외한 시설군에서 공장이 28%, 회사 및 은행이 11%를 차지한다.



〈그림 4〉 1928년발행된 『대전군군세일반』

공장의 경우 섬유관련 제사공장과 종방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운송수단의 발달과 주변에 위치한 1차 산업 생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일본재벌회사인 삼정물산지점 진출도 대전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일본자본 유입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 인쇄소 4개소, 본정2정목에 위치한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정미소 3개소, 양조장 4개소가 위치해 있다. 대전형무소가 공장에 분류된 것은 형무소 내에서 생산과 관련된 노역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은행 및 회사분야의 총 16개 시설을 보면 대상범위에 15건, 기타에 유성온천주식회사가 유성면에 위치해 있다.

농업관련 3개시설, 상업시설 2개, 공업시설 3개, 금융업 3개, 운수 및 전기 각각 1개시설과 기타 2건의 시설이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군시제사회사를 비롯해 본정에 9개가 위치해 있

으며, 조선흥업주식회사 등 영정에 4개, 춘일정에 1개 시설이 있다. 시장은 대전시장(현, 인동시장)과 대전어채시장(현, 중앙시장)이 본정에 위치해 있다.

그 외 자료로 사회사업으로 분류된 각종 단체가 대전번영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과 관련하여 철도시설 경부선, 호남선과 천안~대구, 대전~공주간 도로 등의 발착 지역이 나타난다.

공공시설과 경관적 요소로 대전시장(인동시장)과 제일공립보통학교(삼성초등학교)에 이르는 가로를 중심으로 본정, 춘일정, 영정으로 형성되는 변화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주요 근대 산업시설이 이곳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5〉 소제호에서 바라본 대전시가 〈그림 6〉 현 테미공원에서 바라본 대전시가(1920년대)

또한 초기 시가지 동쪽과 서쪽으로 소제공원과 대전부사(수도산)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관의 자연적인 요소로써 축을 형성하고 있다. 소제공원³⁾과 대전부사(大田富士)⁴⁾는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스카이라인을 전망하는 관점이 된다.

1910년대 발행된 대전지도를 보면 대전역 동쪽으로 소제호와 소제공원이 위치한다.

자료에 소개되는 내용은 “삼백여년전 유학자 송시열의 연학소(研學所)와 기국정(杞菊亭)이 호숫가 언저리에 위치해 있는 경치가 좋은 곳”이라 소개한다.

조선시대의 전통건축물인 송자고택(1653)은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에서 드물게 전통문화유산으로써 현존하고 있다. 비록 소제공원은 일제에 의해 매몰되어 사라졌지만 전통건축인 송자고택이 담아 내고자했던 자연경관으로 그 아름다움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3) 1927년 일본에 의해 소제호가 매몰되기 전까지 대전역 동쪽 구릉지에 위치했다. 현재 남아있는 우암송시열의 고택인 송자고택이 위치한 주변지역이다. 송자고택과 함께 호수가에 위치한 기국정은 1927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의해 소제호가 매립되면서 지금에 남 간정사로 이전된다.

4) 현재 테미공원 또는 수도산으로 불리는 곳으로 1956년 대흥동 상수도 배수지가 들어서면서 수도산이라 불렀다. 테미고개와 접하고 있으며, 도청이전과 함께 산 아래로 관사촌이 들어선다. 일제강점기 '대전부사(大田富士)'라고 불렸으며, 일본말로 '후지산'이다. 지금도 불철 테미고개 일대는 빗물이 만개하여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1928년 이 곳을 대전에 명승고적으로 분류했음은 아마도 이곳에서 대전역을 향해 내려다보는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겠다.

대전부사는 대전천의 서편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의 수도산(테미공원)으로 고도가 108m 정도에 나즈막한 산이다. 주변에 보문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1932년 충남도청 이전 후 이 곳에 도지사관사 등 관사촌이 자리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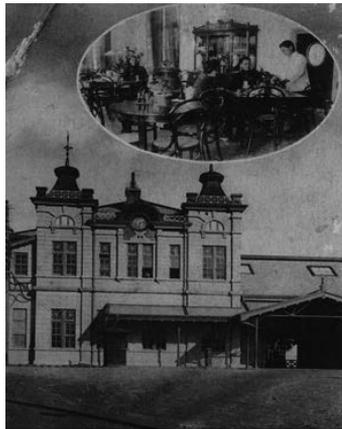
도청이전 전후로 원도심 확장은 대전천 서쪽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전천에는 시가지의 확장에 가교 역할을 맡았던 대전교(목척교, 1912), 대흥교(1918), 중교(1923)가 설치되면서 대전천 서쪽지역으로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게된다.

당시 언론기사에 의하면 대전천의 가로경관은 원도심 형성의 기준축이며 시가지 확장의 경계점이지만, 일제강점기 민족적 자존심에 경계이기도 했다.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쪽엔 일본인 중심의 가로가 형성되었고 서쪽에는 비교적 한적한 조선인 밀집지역이었다.

1930년대 이후 조선인은 일본인의 확장에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대전천변 서쪽지역 개발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천변은 시민들의 행사가 개최되었던 생활공간이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공간이기도 했다.

근대시기 원도심에 주요시설 분포의 특징은 주로 관공서와 철도 관련시설이다. 철도시설에 의해 생산자원의 운송이 원활하다는 점은 1905년 이후 원도심 산업구조 변화에 계기가 된다.

개항이후 보여지는 서양식 건축양식과 일본풍의 건축물이 대전역전(前)인 본정과 영정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우선 중심가에는 대전역, 공무사무소, 기관구, 보선국 등고 같은 철도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 위치한다. 1914년 3월 1일 부령에 의해 회덕군과 진잠군 일부를 통합하여 대전군이 신설되고 그 중심에 대전면이 신설되면서 이전에 회덕에 위치한 군청이 원동(당시 본정1정목)으로 이전하게 된다.⁵⁾



〈그림 7〉 대전역과 내부 레스토랑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백서』, 대전광역시, 2011, 28쪽

주요 시설물중 대전정거장의 경찰서를 제외한 5개가 철도관련시설물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라졌지만, 초기 원도심의 발전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또한 100여년 동안 도시민들에 생활사가 담긴 공간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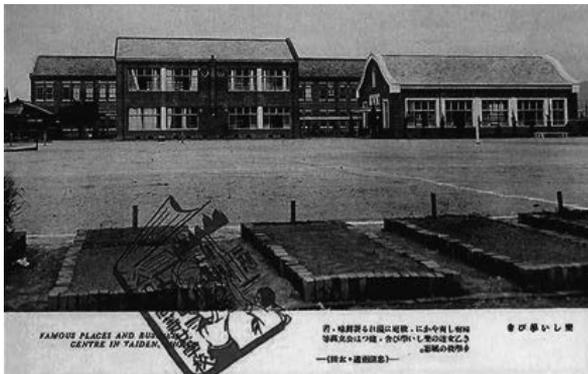
당시 대전역 서편(영정1정목)과 동편(소제동)에 위치한 관사건물 중 동편에 위치한 철도관사와 철도운동장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재개발에 허물어질 형편이다.

한국인은 초기에 주변 전통도시가 가지고 있던 유교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근대 교육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그러나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일본은 지리적으로 유교적 간섭의 영향이 적었던 원도심을 그들을 위한 사학 중심의 거점지역으로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⁶⁾ 초기 시가지에 학교시설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한 교육시설로 나뉜다. 자료에 나타나는 학교시설은 5개소로 본정2정목에 대전심상고등소학교와 대전상업보습학교가 있다.

대전공립심상소학교는 일본인 거주자를 위해 1906년 대전소학교라는 명칭으로 근대교육기관이 처음 개교했다.

대전상업보습학교(1914년)는 한국인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이며, 영정2정목에 위치한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는 한국인 초등교육기관이다. 1911년 회덕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으며 현재 교사 일부가 남아 한밭교육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중등교육기관으로 대전공립중학교는 관립대전중학교(1917년)로 개교하였고, 현재의 대전중학교로 당시의 시설은 남아있지 않다. 대전공립여학교(1921)는 지금의 대전여중으로 현재 대전갤러리로 활용되는 강당(1937년)⁷⁾ 건물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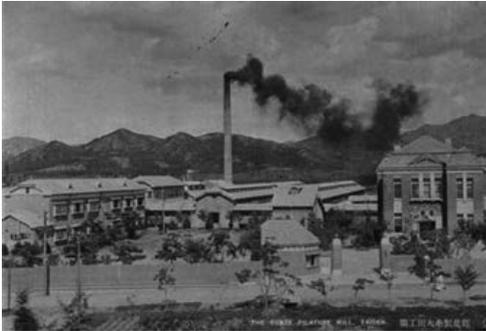
〈그림 8〉 일제강점기 대전공립고등여학교(현, 대전여중) 전경

6)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대전시사1권』, 대전직할시, 1992, 730쪽

7) 아라누보 형태의 지붕을 가진 강당건물은 현재 대전갤러리로 보존·활용되고 있다.

초기 대전의 산업구조는 공업의 발전이 특징이다. 농업중심의 기존 전통도시처럼 가내공업 위주의 생산활동보다는 근대산업과 자본에 의한 생산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철도국 관련시설과 공장시설 중 대전형무소의 경우 관영공장으로 시장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유형은 자본과 전력시설, 지하자원을 모태로한 중화학공업시설 보다는 소비재중심의 섬유, 식품 등 경공업 중심 공장이 주를 이룬다.

공장시설에 있어서 섬유부분은 경성, 대구 등과 함께 근대도시 대전의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는 시설물로 조선내 다섯 번째 규모를 가진 군시제사대전공장과 강곡제사공장, 삼정물산대전건전장 등이 초기 시가지에 위치한다.



〈그림 9〉 군시제사 대전공장전경



〈그림 10〉 본정(현 원동)에 위치한 쓰지양조장

우시장 등이 인접해 고품질의 우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의해 대전피혁주식회사 피혁제조공장은 조선 내에서도 대표적인 피혁공장으로 손꼽힌다.

대전시장이 위치한 본정2정목을 중심으로 간장 및 주류 제조업종의 시설물이 분포되어있다. 대전의 제조업종 간장과 된장은 농산물을 제외한 수출품 1위를 차지한다. 그 중 대표적인 양조장이 본정통에 위치한 쓰지양조장(釀造場)이다.

대전은 신흥도시로써 공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 및 관련 회사의 본사나 지점도 증가하였다.

영정에 대전피혁주식회사와 군시제사대전공장, 본정2정목의 대전전기주식회사는 대전에 본점을 둔 비교적 시설의 규모가 전국적인 회사⁸⁾로 성장하였다. 공장시설로도 분류되면서 대전에서 생산과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군시제사대전공장은 30년대 3차례의 대규모 여직공들의 동맹파업이 있었다. 일본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의 대규모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대산업과 자본주

8) 1911년 영업용전기사업자로 일본자본에 의해 시작되었다. 1920년대 옥천지역에 전력송전(1927)을 하였으며, 청주와 조치원에 지점을 개설하였고, 1930년대 강원도 원주까지 지점을 둔 거대 전력회사로 성장하였다. 현재 전력연구원 연구시설로 사용 중이다.

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 노동쟁의였지만, 민족 간의 갈등으로 해석되며, 결국 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건의 장소가 되었다.

주요 금융시설로 초기 한성은행대전지점과 식산은행대전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대전지점, 대정기업대전지점, 현재 상호 신용금고계의 충남무진주식회사 등이 원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림 10〉 한성은행대전지점



〈그림 11〉 식산은행대전지점(현 다비치 안경원)

옛부터 시골에 일정간격으로 장이 섰는데 대전지역의 장날은 1일과 6일장으로 현재 인동(仁洞)의 '대전장(大田場)'하면 '우시장(牛市場)'으로도 유명했다.⁹⁾ 교통의 발달은 시장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1910~2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조선인이 땅을 매수하면서 시장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이곳에 1914년 약령시(藥令市)가 창설되게 된다. 이는 이백여년 전 공주부에 설립되어 번성하였던 약령시가 1904~05년(광무8.9년경) 교통 불편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대전지역 인사들이 인계하여 설립하였다.



〈그림 12〉 일제강점기 대전시장(현 인동시장)

9) 대전직할시 동구, 『내고장의 역사와 전통』, 1990, 62쪽

이후 1920년대 대구 약령시 다음으로 성황을 이루는 시장이 되었다.¹⁰⁾

현재 재래시장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상권의 쇠퇴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대전에서 3.1운동의 발원지라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잊혀져 가다가 최근에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알리고 있다.

대전역 건너편에 위치한 대전어채시장(大田魚采市場)의 형성 배경도 교통의 요지라는 위치의 이점을 가지고 생겨났다. 어류, 야채, 과물이 주요 취급품목이며 내륙지방인 대전은 교통여건의 장점을 활용하여 어류의 취급 특성상 시장의 이용범위가 부산, 마산, 통영, 원산, 군산, 목포, 신의주, 중국 대련, 일본 등지에서 위탁받아 취급하였다.¹²⁾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중부권 최대시장으로 발전하였으나, 90년대 이후 규모는 줄었지만 현재까지도 대전지역에서 가장 큰 상설재래시장이다.

초기 원도심의 변화가 본정통에 위치한 대전시장과 대전어채시장은 지금까지도 시장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대전시장(인동시장)의 경우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예전의 명성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

IV. 도시의 문화요소로 사라져가는 근대유산

대전역 광장이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철도와 대동천변 사이에 형성된 시야에 들어오는 소제동의 모습은 대전 전통나래관과 1930년대 지어진 철도관사촌이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펼쳐진다. 새롭게 도로가 확장되어 한창 공사중인 소제동은 발전보다는 도시문화의 파괴라는 어휘가 더 어울릴 것 같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되어져 가는 옛 관사촌은 이제 완벽하지 않은 문화오브제로 접하게되는 느낌이다. 도시형성 초기부터 197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그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역 광장의 의미는 색다르다. 대전역 광장은 소위 공공의 영역이다. 이 광장은 원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역을 통해 대전을 처음 접하는 외지인들에게 대전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초기 도시계획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대전의

10) 동아일보, 1923년 12월 03일자

11) 1911년 시마쓰구타로에 의해 본정 1정목에 설립되었다. 주로 생선, 과일, 채소류의 경매 및 위탁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유통망은 철도를 타고 최대 부산과 마산, 목포 그리고 인천과 원산까지 확대되었다. 1912년 요네모토모토스케에게 인수되었으며 해방 직전까지 운영되었다. (대전광역시)

12)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대전시사1편』, 대전직할시, 1992, 678쪽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사람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교통광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하상가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장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하상가와 중앙로로 보행접근성이 매우 불리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보행권 배려가 전무하다. 철도가 개통된 후 현재의 주차 및 대중교통의 동선로가 광장을 차지하기 전까지 대전 시민이 모여 정치·경제·사회 현상의 전반적인 현상들에 대한 토론과 집회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각종 행사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중앙로를 통해 진행되었던 시작점이었다. 이런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는 대전역 광장은 공공의 공간으로 시민들을 위해 조성되었어야 했음에도 어떠한 노력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보면 원도심에 활력을 제공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린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림 13〉 1970년대 대전역광장(좌) 1980년대 산업은행 대전지점(우)

자료: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소

대중로와 중앙로가 교차되는 주변에는 곡선의 지붕이 아름다운 옛 대전여중 강당(현 대전갤러리), 대전지역의 1세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절충형모더니즘 양식과 기능주의 건축물인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현 대전창작센터, 등록문화재100호, 1958)과 최근 문화재로 등록된 고딕양식의 성당건축을 모더니티하게 재구성한 대흥동성당(등록문화재643호), 도심지 재개발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뽕쪽집(등록문화재 제377호) 등 이 가까운 거리에 산재되어 있다.

중앙로네거리에는 아직도 외관이 변형된 대전부청사 건물과 옛 대전문화원 터에 준공 당시 대전에서 가장 높고 현대식 시설을 갖췄던 옛 동양백화점(현 NC백화점)이 서로 대각선상에서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옛 한국은행대전지점 터에는 아직도 짓다가 공사가 중지된 고층의 상업 시설에 골조가 훤히 남아 있다. 그 뒤로 옛 중구청사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대전에 머물며 대전시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지어준 옛 우남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쉽게도 흔적이 모두 사라진 근대화유산들이다.



〈그림 14〉 1970년대 중앙로 오른쪽으로 옛 대전부청사와 한국은행대전지점이 보인다(좌)
현재 옛 대전부청사와 옛 한국은행대전지점이 위치했던 중앙로의 모습(우)

앞서 소개된 몇가지 사례 외에도 다양한 근대유산의 옛 흔적이나 멸실된 사례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건축물만이 아니라 블록단위로 남아있는 공간도 있다. 1900년대 이후로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늘면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인동시장과 중앙시장, 목척시장은 사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옛 건축물과 공간에 남아있는 곳들이다. 대전지역 3.1운동 진원지인 인동시장은 원도심 공동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권이 많이 약해졌다. 이제 옛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 70년대 이후 지어진 복합상가건물이 남아 시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건물들은 1층 미곡을 취급하는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사용율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내부를 둘러보면 당시 계획된 공간구성이 흥미로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추후 재생 또는 활용이 용이해 보인다.



〈그림 15〉 인동시장(좌) 목척시장(우)의 현재 모습

철도부설은 근대화된 유통과정에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형성된 대전어채시장(현 중앙시장)과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식산은행, 한국전쟁 직후 건립된 조흥은행 대전지점 등과 같은 시설은 아직도 무관심 속에도 장소를 지키고 있는 유산들이다.

목척시장은 현재 상점의 분포나 주변 상권으로 보면 이미 시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목척시장에는 일식가옥촌의 일부가 남아 있고 좁은 골목길과 일부 건축물에서 과거의 주거와 시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더불

어 도심 주변에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흔적을 갖는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도시공간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찾지 못했던 문화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시 아카이빙은 새로운 공간에서 잊혀져가는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흔적을 찾아 낼 수 있고, 그 의미와 평가를 재고해 문화적으로 활용이나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2018년 발굴된 대전형무소 터 흔적과(좌) 대전형무소 관사(우)

원도심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단위(cell)들, 그 중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 탈산업화와 원도심의 쇠퇴는 단기간에 발생한 도시문제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이를 방치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에 내재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정체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대문화유산에 문화·예술 등 공공성의 성격을 부여하여 이를 문화주도형의 도시재생 정책 수립과 공간적 범위의 프레임 구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여행하면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자면 업타운(uptown), 다운타운(downtown) 또는 올드타운(oldtown), 뉴타운(newtown)이라고 도시공간을 분리하여 표현해 놓은 경우를 종종 접할 때가 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단순한 프레임이다. 그리고 지도에 안내를 따라 걷다보면 역사와 문화, 도시의 발전 모습 등 그 도시의 맥락을 읽을 수 있으며, 도시를 이해하기 쉽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려면 올드타운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일상과 발전의 정도를 느끼려면 뉴타운으로 이동하면 된다. 앞서 서술한 대전지역에 다양한 문화자산 중 건축이나 공간적인 자산은 문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물리적 자산 지역문화의 발전 인자 및 문화생산으로서 필요한 물적 인프라나 건조 환경 등을 의미한다.

더 늦기 전에 1990년대 이후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신도시와는 다른 차원의 역사와 문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근대유산과 지역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적 프레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유형에 다양한 도시의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복잡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문화를 공유해 보는 것도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성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동 · 이기승(1987), 대전시 가로경관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중앙로를 중심으로
- 이상희(2013), 대전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역사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김정동(2011),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지회연합회논문집, Vol.13 No.4.
- 이상희·김정동(2012), 근대건축 보존을 위한 도시공간의 역사성 연구-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최장락 · 이상희(1913), 대전지역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 디지털융복 합연구, Vol.11 No.11.
- 대전군(1917), <대전군세일반>, 대전군
- 대전부(1928), <대전발전지>, 대전부
-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1992), <대전시사>, 대전직할시.
-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1999), <사진으로 보는 대전시사(상·하)>,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2002), <대전100년사>, 대전광역시.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2010), <대전근대유산목록화보고서>,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1997),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 충청남도.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 충청남도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대전근대아카이브즈포럼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의 문화 현실
: 문화공동체의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의 문화 현실 : 문화공동체의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일 시 2019년 10월 24일 14시 30분~15시 30분

장 소 독립책방 '다다르다'

참 석 자 사회와 질의 : 한상현(대전세종연구원)

김준태(독립책방 '다다르다' 대표)

송부영(문화공간 '구석으로부터' 대표)

이인복(대전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사무국장)

여선정(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표)

..... **Q** 각자 활동 영역이 다른데, 대전 문화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인가? 또한, 특히 행정영역에서는 문화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문화공동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송 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 정의를 내려줘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Q** 간단하게 말하자면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는 문화 활동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각자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같이 회원으로 있는 원도심 '문화예술인 행동'이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기에,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에서 정책을 진행할 때 이게 원도심에 어울리는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어디와 대화할 것인지 등 현장에 맞는 정책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원들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 작은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다. 작은도서관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도서관, 국립도서관 같은 곳이 아니라 동네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갈만한 작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어른들도 함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관련 조례가 생기고 정책이 마련되어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똑같다. 10년 전에 비해 물가는 엄청나게 변했지만, 정책과 지원은 몰랐지만 도서 지원 정도만 지원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은 할 수 없다. 보통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받은 예술인들과 창작단체에 있는 종합 예술인분들의 제안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도 없으면 도서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책을 매개로 주인공이 되어

- ④ 연극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도 지원 없이는 힘들다. 그래서 자비로 돈을 모아 직접 만들거나 발품을 팔아 무대 의상과 무대 세팅을 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책을 매개로 하면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는 곳도 마땅하지 않다. 책에서 파생되는 문화효과가 다양한 것에 비해, 도서관이라는 제한적인 생각 때문에 활동 범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 ⑤ 저희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본다. 저희는 하고 싶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고 싶은 것 보다 공공성이 우선한다'고 보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 공공성과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지원보다는 항상 자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생을 하려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연대가 되어야 시도가 가능하고 자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후에 이것을 향유하고 접근하는 것이 이차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말이 지역 공동체, 사회공동체, 사회적 자본 이런 곳에서는 공동체성이 밀접하게 부각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분야는 공동체성 보다는 더 느슨한 연대 형식의 공동체라고 본다. 연대성이 강한 이전의 공동체라는 말은 몇 년 전이나 수년 전에 출발했던 언어로 보이며, 지금 세대로 느껴지는 과거의 공동체는 많이 사라졌다고 본다. 또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도 많이 사라졌기에 연대적인 느낌이 강한 공동체라는 언어보다는 다른 형식의 단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연대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하는 연대, 창작을 위한 연대도 있고 이런 것을 넘나드는 연대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공동체라기보다 연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창작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지점이 공공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공을 위해 창작을 시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시와 재단이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창작자 우선으로 진행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

④ 김 '서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역할과 기능 또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으로 한정된 의미를 지닌다. 최근 대전에는 14개의 독립서점이 생겼는데, 이중 대다수는 지역 주민의 지적 대화를 나눌 공간 또는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공공의 정책은 독립서점을 단순한 서점 사업자(소상공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주고 있다. 아마도 앞서 이야기했던 '도서관'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 Q 문화 활동에서 벌어지는 느슨한 연대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공동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문화 활동의 자발성을 이야기하면 공동체 영역에서는 그것이 좀 추상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부영씨는 1차적, 2차적 공동체를 말씀 하셨는데 '구석으로부터'는 그것을 매개하는 쪽인가 아니면 활동의 장을 만드는 쪽인가?

④ 송 우리는 주로 장을 만드는 쪽이다. 장을 만들면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만나다 보면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인다. 1차적으로는 창작자들이 만나고, 2차적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3차적으로는 무심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공동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작은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사님이 '대흥동립만세'를 예로 든 것처럼 세대에 맞는 링크 방식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링크가 다양할 것이다.

④ 김 '도시여행자'는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단순한 서점업의 회사로 인지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방향성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 도시여행자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프라인 서점 공간에서 책을 구매하는 '느슨

① 김 한 독서 공동체를 만들고, 약 14개의 독서 모임을 통해 ‘단단한 독서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단단한 독서 공동체 : 소셜클럽’ 프로그램)3개월 단위로 운영중이며 각 시즌별로 약 67명이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동체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동체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정 공간을 임차해 함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창작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서점에서 ‘책’을 매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급적 ‘출판 및 인쇄물 창작’으로 특화시키려 한다.

..... Q 대전에서 창작자 연대조직과 같은 부분들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① 이 갈수록 공동체, 협회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다. 젊은 친구들은 협회를 들어가거나,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협회나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새롭게 조직도 잘 안 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 같다.

① 김 이전에 대흥동에서 (‘가칭’ 느슨한 연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대전에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 중인 예술 단체, 그 중에서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예술 단체 약 15팀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각 팀의 근황과 단체에 대한 소개를 주고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장 무언가를 해내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3회 차 모임 이후에 잠시 중단 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가칭’ 대전독립서점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2014년 3월, 도시여행자를 시작으로 대전에 ‘독립서점’을 표방하는 서점이 14개까지 늘어났다. 사업자등록증을 냈지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서점까지 포함하면 18개 정도다. 이러한 서점들은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출판, 서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과 다양한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 중이다.

- **Q** 예총이나 예술분야별 협회 등 예전의 협력체 방식이 요즘은 잘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협력체가 필요한 것인가?
- 이** 그렇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없고, 리드해도 동조해서 따라주는 사람도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는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분석해야 될 것 같다. 개인주인화가 되어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출연료를 못 받은 것에 화를 낼 때, 그럼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못 받은 사람부터가 그냥 참고 넘기려는 부분들이 많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 여** 요즘 친구들은 소통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요즘은 SNS 위주라 그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냥 SNS에 업로드하면 끝이다. 친구들과 고 있어도 같이 이야기하기보다 휴대폰을 보며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러더라.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다.
- 이**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도 노조에 가입을 많이 안하는 추세인 것 같다. 예술인들에게 노조를 만들자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게 전반적인 사회적인 트렌드이다 보니 같이 목소리를 내거나 얻고자 하는 게 없다. 그래서 같이 함께 연대하는 부분도 없어진 것 같다.
- 김** 기존의 협회 또는 예술 협회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이전 세대와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문화재단과 예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문화예술계가 정치적인 관계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느낌도 받는다.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계는 유독 유착 관계가 심한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개선하려 노력해야겠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연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
- ① 확실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도 위축되고 있다. 이젠 정말 시민운동은 끝이 난 것 같으며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문화정책에 문제를 제기 하거나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는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단체가 조직되는 활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② 문화공동체에서 언급할 수 있는 큰 분야는 생활문화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문화 창작을 베이스로 보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생활문화공동체와 더불어 지역문화공동체이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향유자들이 직접 참여 한다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든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에 가더라도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대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려면 이를 생활문화로 향유하고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적으로 한 단계 올라간 공동체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나 행정 부분에서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해주고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순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 더 디테일한 설계와 행정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활문화가 공동체로 연계 시키기가 더 쉽다. 같은 관심사의 취미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작게 보면 책 읽는 모임, 밴드하는 모임, 연극 하는 모임 등 이런 모임들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며 삶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에너지를 채우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이 공동체와 연대가 발달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창작하는 집단에서 봤을 때 이것이 더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같이 연결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걸 생활문화, 창작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묵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 ③ 대다수의 문화예술계는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자생력이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도 다양한 문화 공동체가 나와야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

④ 김 각한다. 지자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강한 비판이 필요할 때 비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는 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 ⑤ Q 전체적으로 향유의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게 발전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다. 하지만 연극 창작 쪽에서는 갈수록 어렵다고 보셨는데, 대전의 연극 수요층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나요?

⑥ 이 저희는 직장인과 주부들로 구성된 두 개의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이런 동아리 모임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 문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공연장에서 ‘연극 함께 보기’ 동아리처럼 함께 본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하며 함께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다 무너졌다.

⑦ 여 역설적으로 본다면, 모일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공동체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 것이고, 요즘에는 공동체에 공감할 수 없기에 안 생기는 것이다. 요즘은 개인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는 새로운 것은 출연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어떤 정체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돌아 다녀보면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어떤 분야든 아직 찾지 못했기에 링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노년화가 될수록 여유 시간이 많아지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는 어떤 형식으로도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맞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열어줘야 될 것이다. 모임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공동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읽기 프로그램 모임에서는 돈을 많이 지불하고도 멤버십

여 을 위해서 모인다. 공동체에 만족하기에 소속된 자부심도 있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넓어지는 것이다. 의지 자체가 없다가보다는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자체가 없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의지 자체는 많이 있지 않을까 한다.

..... Q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과제로 삼으려고 한 것 같다. 그중 하나가 독립서점, 마을박물관인데 이게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 독립서점은 대전에도 많이 있다. 실제로 서점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들어갔던 서점이 있다. 좋은 계기가 되어 활동가와 함께 갔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기수를 바꾸며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 본인이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주제로 하여 생각하고 공유하며, 스케치도 하고, 물건 같은 것 이외에도 사진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는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그들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맞을 때 동아리가 잘 운영되는 것이다. 추구하는 가치가 같으면 함께 하는 게 충분해 보이고 이게 다른 것과 연계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아리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모임들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독립서점에서 연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문화가 다양하게 확장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두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요즘의 사회적 경향은 젊은 친구들이 문화 활동을 잘 안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도서관 박물관에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코디네이터 하며 전국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때 사서가 가장

① 힘들어 하는 것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좋은 인문학 강좌든 어떤 프로그램이든시간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아서 숙제고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었다. 돌이켜보면 문화 영역 중 예술 분야는 유독 지원금에 비해 사람이 없다. 스포츠는 자기가 좋아서 동아리를 나가며 시에서 유니폼과 공을 사주지 않아도 자비로 회비도 내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관련되면 악기도 지원해주고 선생님도 보내주는 등 공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더 안 뭉치게 된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돈이 아니면 모이지 않고, 공적자금의 예산에 따라 사람들이 뭉쳐 다니면서 단체가 우리에게 뭘 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닌다. 지원금이 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스포츠처럼 조직화 되는 건 민간에게 두고 조기 축구처럼 축구장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거지 문화예술처럼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다 해야 한다. 한때는 어렵게 알아낸 공모사업 있으면 공유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직원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 경쟁자인데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공공의 사람인가 개인인가 그런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의 월급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회비가 걸리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부러운 사례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높으니까 조합원이 일을 해줄 수 있다. 이는 목적이 명확하니깐 가능한 것이다. 문화예술은 조합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걸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계는 있고, 이쪽 시장이 열악하다보니 그런 조합비를 내는 것도 어렵다. 희망이 있으면 계속 하겠는데, 이미 어렵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술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연대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으며, 그만두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

..... **Q** 지원에 의존해 전유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동호회 지원이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 처음에 직장인 연극동아리를 만들 때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었다. 직접 운영비로 쓸 수 없으니깐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훈련과정을 거쳐서 공연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다 공개하고 사비로 간식을 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야” 하더라. 그래서 2년차에는 예산 신청을 안하고 진행을 하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의 나갔지만, 남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비를 걷고 재건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자력으로 하게 되니까 유지가 되더라.

김 공공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여럿 봤다. 대전의 청년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에서 청년 공유 공간을 표방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던 팀은 사업비가 없더라도 지속되지만, 공공의 사업비를 통해 위탁 운영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다가도 사업비가 없으면 커뮤니티가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럿 봤다. 결국 공모사업도 자립도의 비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민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본다.

..... **Q** 올해 초에 문화재단 동호회 지원 사업 심사를 했는데 지원단체가 많지 않았다. 선정기준도 까다롭지 않았는데.

여 소규모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같은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활동을 하다가 역량을 더 키우고 싶은 경우도 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립으로는 어려우니깐 지원을 받아서 해보자 해서 아예 전문분야로 가는

- ④ 사람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수도 있다. 오랫동안 마을 공동체 사업이 많아서 동아리 사업이 많이 지원 됐었는데, 이제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못한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전문분야로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정도면 지원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연대해서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축제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에서 하는 축제는 한계가 있다. 그냥 동원해서 체험부스 차리고 부녀회에서 음식 하는 것이 전부이지, 더 나아가서 마을에서 순수하게 자립해서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을 연대해서 할 수 있게 조직하면 지역적인 특성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화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이 든다.
- ⑤ 공동체에 대해 몇 년째 고민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고 있다. 어머니들끼리 도서관에 모여서 인형극을 하는데 처음엔 아무 정보가 없어서 선생님들 부르고 지원을 받아 재료도 사고 인형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더라.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공연해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인형극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값만 주시면 공연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연극을 해달라는 학교 같은 곳에서 예산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게 편성한다. 그리고 생업인 전문가들이 그 금액으로 공연은 안 된다고 하면 저번 달에는 그 금액으로 했었다고 요구한다. 재능기부를 요구받는 이런 문화적 생태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굉장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
- ⑥ 이런 부분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동아리 지원은 질의 확장이 아니라 양의 확장이라고 본다. 동아리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이다. 양이 늘어나야 인프라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분야로 나가지 않더라도 소비가 생기게 된다. 무엇인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만들어보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참여하는 사람의 양이 늘어나면 기존의 전문집단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보고 배웠을 때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전문배우의 필요성까지 연결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극을 취미로 하는

- ③ 사람이 전문인의 연극을 보면 연극에 어느 정도 더 밀접해지게 된다. 일반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은 동아리로 전문배우가 되어야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때는 다시 소비자로 돌아간다. 취미로 인해 소비자가 깊어지면, 이 깊어진 소비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 배우뿐만 아니라 향유자가 더 공연하고 싶고 전시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하고, 어떻게 조인을 해서 연결되는 것을 알려줄 공간도 필요하다.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를 활용해서 시민들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원래 행정기관이 하는 게 맞다. 큰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그 도서관들이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게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문가와 동아리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 매개역할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④ 직장인 연극동아리를 만들었던 목적 중 하나는 수요의 욕구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을 보고 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동아리 활동은 하지만 연극은 안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실제로 주민 센터에서도 보면 농악이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연을 하면 관람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본인의 취미 활동 행위로서는 좋지만, 관람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술을 직접체험활동으로만 접했기 때문인 것 같다. 행위로서는 배웠지만, 관람하는 것은 잘 배우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술이면, 그림 그리는 등의 이론적 행위만 배웠지 갤러리 가서 그림을 어떻게 보고 관람해야 하는지와 같은 관람법은 못 배운 것이다. 이렇게 관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미술은 알록달록, 클래식은 즐린 것 등의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이다.

편집위원

위원장 박노동(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위원 박근수(배재대학교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설성수(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온정(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규(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헌(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남석(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충만(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윤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민경선(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1호

발행일 2019년 12월 2일

발행인 박재묵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2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연구과제 제안 안내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